

덕송내각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사업 시행조건 조정에 따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변경실시협약 체결안

의안 번호	465
----------	-----

제 출 일 : 2024. 5. 31.

제 출 자 : 남양주시장

1. 제안이유

- 2017년 개통한 덕송내각 민자도로의 운영 적자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파산 및 도로 운영 중단이 예상되어, 도로의 공공성 상실에 따른 공익에 미치는 영향, 사업시행자 파산시 실시협약에 의한 우리시 일시 대규모 해지시지급금 부담 우려 발생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사업시행자와 사업 시행조건 조정¹⁾(이하, ‘사업재구조화’) 협상을 완료하였으며, 사업방식 변경 등의 변경실시협약 체결에 대한 의회 동의로 도로의 안정적 운영 도모 및 우리시 예산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변경실시협약 의회 동의 외에 예산 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 예산 외의 의무부담²⁾에 따른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 7. 생략
 -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 사업시행의 조건 등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을 “실시협약”이라고 함

2)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았으나 협약 조건 충족시 자치단체가 의무부담

※ 예산외 의무부담(비용부담협약): 사업시행자, 협약당사자 등과 투자비용, 금융비용, 운영손실 비용 등을 보전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 「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2조(의회의 동의 등)
 -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을 체결·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남양주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업무제휴·협약의 체결방법) ③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1.~3. 생략
 - 4.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

3. 주요내용

-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개요
 - 사업위치: 남양주시 별내동~진접읍 내곡리
 - 사업량: L=4.901km, B=20.0m(별내터널 1,318m, 진접터널 1,962m)
 - 총사업비: 1,649억원(2007. 10. 1. 불변가격)
 - ※ 우리시 재정지원(건설보조금 및 보상비) 없음
 - 관리운영기간
 - 당초 2017. 4. 14. ~ 2047. 4. 13.(30년)
 - 변경 2017. 4. 14. ~ 2067. 4. 13.(50년)
 - 사업방식
 - 당초: BTO(Build Transfer Operate)³⁾
 - 변경: 사업시행자 책임변제 방식⁴⁾
 - 우리시 예산 외의 의무부담 발생

3) 사회기반시설의 준공(Build)과 동시에 해당시설의 소유권이 주무관청에 귀속(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Operate)을 인정하는 방식

4) 실제 통용되는 시사용어는 아니나, “인천북항일반부두”, “포항영일만신항” 민간투자사업에서 유사한 사업방식이 적용된 실례가 있으며, 사업재구조화 비용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차입하여 변제하는 방식(사업재구조화 비용(1,682억원) 중 1,582억원은 주무관청 보장차입금(해지시지급금), 100억원은 미보장차입금으로 사업시행자 책임 변제)

· 발생액:

주무관청 부담액(경상가)	787억원	예산 외의 의무부담
주무관청 부담액(현재가치)	706억원	할인율 4.5%

· 기간: 2024. 1. 1. ~ 2067. 4. 13. (44년 4월)

· 연도별 발생 세부내역: 붙임 비용추계서 참조

○ 그간 추진 현황

- 2022. 12. 27.: 사업재구조화 협상 대행 위탁협약 체결

· 市↔*한국교통연구원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

* 국책연구기관(「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기획재정부 지정 전문기관)

- 2023. 1. ~ 5.: 사업재구조화 대안 검토 및 분석(한국교통연구원)

<교통수요 추정위험이 높은 사업 특성 고려시 주무관청 리스크 최소화 재구조화 대안 설정>

1안) 재정전환(우리시 직접 운영)

2안) MCC방식⁵⁾(신규사업자, 기존사업자)

3안) 기간연장 + MCC방식(신규사업자)

4안) 기간연장 + 사업시행자 책임변제방식(기존사업자)

→ 실현가능성 검토 결과 재정부담 절감, 도로 지속 및 사업자 책임 운영 등을 고려한 우리시 가장 유리한 대안

- 2023. 6. 12. ~ 2023. 12. 13. : 소실무회의 16회, 실무협상 3회, 본협상 4회(정부측↔사업시행자측)

· 기간연장 + 사업시행자 책임변제방식으로 우리시 유리한 협상안 도출

- 2023. 12. 22.: 사업 시행조건 조정 협상 결과 최종 보고
(한국교통연구원→市)

- 2023. 12. 27.: 사업 시행조건 조정 협상 결과 최종 방침

- 2024. 4. 5.~ 4. 23.: “예산 외의 의무부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가결
· 운영비 등 시의 재정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 및 지방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 이행

5) 최소비용보전(MCC, Minimum Cost Compensation)방식: 통행수입이 지출비용(원리금 상환 및 운영비용 등)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액을 주무관청에서 지원하는 방식

○ 향후 추진계획

- 2024. 6.: 남양주시 의회(제303회 제1차 정례회) 의결
- 2024. 6.: 변경실시협약 체결(市↔사업시행자)

4. 참고사항

○ 협상 결과에 따른 변경실시협약(안) 주요 내용

- 사업추진 방식 변경
 - BTO 방식→BTO+사업시행자 책임변제방식
- 사업기간 연장(당초 30년→변경 50년)
 - 기간연장으로 인한 우리시 재정부담금 절감 및 연장 기간 기존 사업시행자 책임운영
- 통행료 결정권은 주무관청, 미인상 통행료 차액은 주무관청 보전
- 해지시지급금 감소

구분	2020년 말	2021년 말	2022년 말	변경협약
금액	1,741억원	1,675억원	1,609억원	1,582억원
비고	사업시행자 귀책 해지시지급금			귀책 여부 무관

- 관리운영권가치를 보장차입금과 미보장차입금으로 구분
 - 보장차입금 1,582억원(해지시지급금), 미보장차입금 100억원(사업시행자 책임 부담)
- 보장차입금 자금재조달 이익은 전액 주무관청 귀속
- 미보장차입금 자금재조달 이익은 주무관청과 50:50 이익공유
- 교통 수요 증가시 미보장차입금 원리금 상환 후 재정지원액 전액 상환까지 잉여금 주무관청 귀속→사업시행자 추가 이익 차단
 - 기존 사업시행자의 책임 변제 + 책임 운영 방안 마련
- 주무관청 지급금(환수금)은 매년 회계법인 등 검증 후 정산
 - 객관성 확보를 위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 협의하여 회계법인 등 선정
- 임시운영기간 주무관청 기부담 비용(44.28억원)은 관리운영권 가치 및 운영비에서 차감(관리운영권가치 차감: 4억원, 운영비 차감 40.28억원)

붙임1 비용 추계서

(단위: 억 원)

구분	합계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보장차입금	1,582	-	-	-	39	39	39	39	39	39	39	39	39	39	39	39	39	39	39	39	39	39	39	39	39
차입금이자	1,615	69	69	69	69	67	65	64	62	60	58	57	55	53	52	50	48	46	45	43	41	39	38	36	34
통행료수입	6,620	72	78	84	87	89	94	102	114	123	125	125	128	131	131	134	138	141	141	144	148	150	151	154	157
운영비용	3,963	51	68	54	83	63	66	65	71	74	73	68	71	87	81	86	77	75	78	86	81	82	86	88	97
정산비율(%)	90	70	70	70	83	83	83	83	83	83	83	93	93	93	93	93	93	93	93	93	93	90	90	90	90
정산이익	2,398	11	8	18	8	17	23	29	35	39	43	50	54	45	45	46	53	61	58	55	60	62	58	59	56
사업자이익정산	11	-	-	-	-	-	-	-	-	-	9	-	-	-	-	-	-	-	-	-	-	-	-	-	-
	2,410	11	8	18	8	17	23	29	35	39	52	50	54	45	45	46	53	61	58	55	60	62	58	59	56
부담액(경상)	787	59	61	51	100	90	82	74	66	61	46	46	41	48	46	43	34	25	26	27	21	17	19	16	18
부담액(현가)	706	56	56	45	84	72	63	54	46	41	30	28	24	27	25	22	17	12	12	12	9	7	7	6	6

구분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보장차입금		39	39	39	39	39	39	39	39	39	39	39	39	39	39	39	39	39	39	39	10
차입금이자		33	31	29	27	26	24	22	20	19	17	15	14	12	10	8	7	5	3	2	0
통행료수입		160	161	164	168	172	175	179	182	185	190	193	195	202	205	207	213	218	221	225	64
운영비용		86	104	96	93	106	99	98	103	122	113	103	108	128	119	127	119	115	121	120	73
정산비율(%)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93	94	94	94
정산이익		64	54	59	66	61	66	72	72	59	67	79	78	71	75	72	82	93	94	98	26
사업자이익정산		-	-	-	-	-	-	-	-	-	-	-	-	-	-	-	2	-	-	-	-
		64	54	59	66	61	66	72	72	59	67	79	78	71	75	72	84	93	94	98	26
부담액(경상)		7	16	10	1	4	-3	-10	-12	-1	-10	-24	-25	-20	-26	-24	-38	-48	-52	-57	-16
부담액(현가)		2	5	3	0	1	-1	-3	-3	-0	-2	-5	-5	-4	-5	-4	-7	-8	-8	-9	-2

※ 금융약정체결 시점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 예정이며, 물가상승률, 교통수요 변화 등에 따라 주무관청 부담액 변동 가능

붙임2

변경실시협약(안)

※ 금융약정 체결 시점에 따른 수권 절차 시 기준금리 등 경미한 변경 가능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실 시 협 약

2023. **. **.

남 양 주 시

덕송내각고속화도로 주식회사

〈목 차〉

제 1 장 총 칙	1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1
제 1 조의 2 (협약의 효력)	2
제 2 조 (사업의 추진방식)	2
제 3 조 (용어의 정의)	2
제 4 조 (협약의 해석)	12
제 5 조 (문서의 우선순위)	13
제 2 장 기본 약정	13
제 6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13
제 7 조 (사업시행자의 권리)	14
제 8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14
제 8 조의 2 (건설출자자의 기존 차입금액 상환의무)	15
제 9 조 (소유권의 귀속)	15
제 10 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15
제 11 조 (협약의 성실히행)	16
제 3 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16
제 12 조 (총사업비)	16
제 13 조 (총사업비의 변경)	16
제 4 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18
제 14 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18
제 15 조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18
제 16 조 (자금차입)	18
제 5 장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사항	19
제 17 조 (설계, 인허가 등)	19
제 18 조 (실시계획의 승인)	20
제 19 조 (공사비)	20
제 20 조 (공사기간)	20
제 21 조 (공사의 착수)	21
제 22 조 (공정관리)	21
제 23 조 (설계, 공사의 도급)	22
제 24 조 (관련 법령 등의 준수)	22
제 25 조 (도급·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23
제 26 조 (위험물 및 지장물)	23
제 27 조 (문화재)	24
제 28 조 (사업이행보증금)	24

제 29 조 (지체상금)	25
제 30 조 (보험가입)	25
제 31 조 (주무관청의 감독)	26
제 32 조 (기성검사)	27
제 33 조 (민원처리)	27
제 34 조 (환경 및 안전관리)	28
제 35 조 (공사책임감리)	28
제 36 조 (예비준공검사 등)	29
제 37 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29
제 38 조 (조기준공)	30
제 6 장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1
제 39 조 (운영비용)	31
제 40 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 계약)	32
제 40 조의 2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 의무)	32
제 41 조 (운영실적의 제출)	33
제 42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33
제 43 조 (경미한 사업)	34
제 7 장 사업수익률 및 통행료	34
제 44 조 (기준사업수익률)	34
제 45 조 (기준통행료 및 조정통행료, 징수통행료 등)	35
제 46 조 (통행료의 징수)	36
제 46 조의 2 (통행료 미인상 또는 인하에 따른 차액의 처리 등)	37
제 46 조의 3 (통행료 정산)	37
제 7 장의 2 정산대상이익금, 환수금 및 지급금 등에 관한 사항	38
제 47 조 (정산대상이익금 정산의 원칙 등)	38
제 47 조의 2 (주무관청환수금 또는 주무관청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등)	39
제 47 조의 3 (주무관청환수금 또는 주무관청지급금의 검증 및 정산 등)	40
제 47 조의 4 (정산기준금 상각액의 조기 상각)	41
제 8 장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41
제 48 조 (행정적 지원)	41
제 49 조 (사업부지의 제공)	42
제 50 조 (보상업무)	43
제 51 조 (접속도로시설의 적기준공)	43
제 52 조 (의도적 삭제)	43
제 53 조 (수요위험의 처리)	43
제 9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44
제 54 조 (위험배분의 원칙)	44
제 55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44
제 56 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	45
제 57 조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45

제 58 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청구 및 이의신청)	47
제 10 장 협약의 종료	48
제 59 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48
제 60 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48
제 61 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50
제 62 조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51
제 63 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52
제 64 조 (매수청구권)	52
제 65 조 (기간만료, 해지 및 매수청구시 선관의무)	53
제 11 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53
제 66 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53
제 67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53
제 68 조 (출자지분의 변경)	54
제 69 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55
제 70 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55
제 70 조의2 (자금재조달 여건 보고 및 주무관청의 자금재조달 요청 등)	56
제 12 장 분쟁의 해결	56
제 71 조 (분쟁의 해결)	56
제 72 조 (중 재)	57
제 13 장 기타 사항	57
제 73 조 (협약의 변경)	57
제 74 조 (협약의 수익자)	58
제 75 조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58
제 76 조 (일부무효)	58
제 77 조 (목시적 조건의 배제)	59
제 78 조 (비밀유지)	59
제 79 조 (통지)	60
제 80 조 (언어)	60
제 81 조 (준거법)	61

전 문

남양주시장(이하 “주무관청” 이라 한다)과 덕송내각고속화도로 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 라 하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각자를 “협약당사자” 라 하고, 총칭하여 “협약당사자들” 이라 한다)는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이하 “본 사업” 이라 하며, 이하 구체적으로 정의한다)의 실제 통행료 수입이 목표 통행료 수입에 미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본 사업의 운영 중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2009년 9월 29일 체결한 실시협약 및 2018년 3월 30일 체결한 변경 실시협약(이하 총칭하여 “기존 실시협약” 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2023년 **월 **일 변경실시협약(이하 “본 협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 ① 본 협약은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제3자 공고,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본 사업을 시행하되, 본 사업의 운영 중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협약 체결일 이후에 대해 협약당사자들 사이에서 합의된 사업시행조건으로 기존 실시협약을 변경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본 사업의 범위, 본 사업시설의 범위 · 규모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구간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 진접읍 내곡리
 3. 주요시설 : 영업소 2개소, 교차로 3개소 등
 4. 제 원 : 4.901km(왕복 4차로, 폭 20.0m, 설계속도 80km/h)

제 1 조의 2 (협약의 효력)

- ① 본 협약은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고, 본 협약 체결일을 본 협약의 효력발생 일이라 한다.
- ② 기존 실시협약의 규정은 본 협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사항에 대하여 본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하며, 본 협약의 내용대로 변경된다. 다만, 본 협약 체결일 현재 본 협약의 내용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기존 실시협약에 따라 발생한 협약당사자 간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③ 본 협약에 첨부된 부록은 본 협약의 일부로서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 2 조 (사업의 추진방식)

본 사업은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방식에 따라 수익형 민자사업(BTO)으로 추진하되, 주무관청이 본 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비용을 보전하기로 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본 협약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민간투자법에 정의된 용어는 민간투자법에서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

1. 개월 : 어느 역월의 특정 일자에 시작하여 해당 역월의 그 숫자의 상응 일자에 종료하는 기간을 말한다. 다만, 해당 역월에 숫자상으로 상응하는 날이 없는 경우 위 기간은 해당 역월의 최종일에 끝나는 것으로 한다. 개월의 산정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표준시를 기준으로 한다.
2. 건설기간 :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건설사업관리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4. 건설사업관리자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서울특별시장 또는 그 권한

을 위임 받은 자가 지정한 자(승계인 또는 대체인을 포함함)를 말한다.

5. 건설이자 :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하여 준공시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협약에서 정한 이자비용을 말한다.
6. 건설출자자 : 출자자 중 디엘이앤씨 주식회사를 말한다.
7. 경미한 사업 : 민간투자법 제14조(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제4항의 단서 및 본 협약 제43조(경미한 사업)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한 사업을 말한다.
8. 계열회사 : 사업시행자 또는 그 지분을 소유한 자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의한 계열회사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대한민국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4호의 국외특수관계인을 말한다.
9. 공사기간 : 본 사업시설의 공사착수일로부터 민간투자법에 따른 본 사업시설 전체에 대한 최종준공확인을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10. 공사비 : 본 협약에서 규정한 공사비로서 부록 2(총사업비)에서 정하는 공사비를 말한다.
11. 공사착수일 : 본 협약 제21조(공사의 착수)에 따라 주무관청에 제출한 착공보고서상의 공사착수일을 말한다.
12. 관계기관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제세공과금 부과 등 행정절차 또는 행정규제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수행에 합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를 의미한다.
13. 관리수탁자 : 관리운영위탁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14. 관리운영권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동안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고 유지·관리하며 시설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민간투자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에 의한 권리를 말한다.
15.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 민간투자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16. 관리운영위탁계약 : 제40조(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 계약) 제1항에 따라 본 사업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관리의 위탁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관리수탁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17. 교통량 : 본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의 총량을 말한다.

18.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 대한민국 법률 제9071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요구되는 교통영향평가를 말한다.

19. 기본설계 :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을 감안하여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개략공사방법 및 기간, 개략 공사비 등에 관한 조사, 분석, 비교·검토를 거쳐 최적안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도서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설계업무로서 각종사업의 인·허가를 위한 설계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및 조건 등 실시설계용역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9 및 기본설계등에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4호)에 따라 작성되는 것을 말한다.

20. 기본재무모델 : 실시협약 체결 당시 제반 사업시행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된 재무모델을 말한다.

21. 기존 대주단 : 중소기업은행을 대리은행으로 하는 기존 자금차입의 대주들을 말한다.

22. 기존 자금차입(금) : 사업시행자가 기존 대주단으로부터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 것(또는 그 차입금)을 말하며, 그 원리금을 모두 통칭할 때에는 “기존 자금차입원리금” 이라 한다.

23. 기존 자금차입계약 : 기존 자금차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기존 대주단 간에 체결된 차입계약을 말한다.

24. 기준사업수익률 : 정산기준금 수익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비율로서 제 44조(기준사업수익률)에서 정한 비율을 말한다.

25. 기준이자율 : 그 산정시점의 직전 1개월 동안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 (<https://www.kofiabond.or.kr>)가 고시하는 5년 만기 국고채의 최종호가 유통수익률을 산술평균한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만약,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으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협약 제12장(분쟁의 해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26. 기준재무모델 : 기본재무모델에 자금재조달 승인 신청일까지 현금흐름 실적 및 미래예측물가를 반영한 현금흐름 예상액 등을 반영하여 작성된 재무모델을 말한

다.

27. 기준통행료 : 부록 5(차종별 기준통행료)에 정한 2007.10.1. 불변가격 기준으로 산정된 차종별 통행료를 말한다.
28. 기타수입 : 사업시행자가 경미한 사업을 통하여 얻는 수입을 말한다.
29. 담보권 : 저당권, 유치권, 질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기타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30. 대리은행(또는 대리기관) : 자금차입계약의 대주단이 대리은행(또는 대리기관)(채권발행의 경우 수탁은행 포함)으로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31. 대주단 :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을 위한 금융을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며, 채권발행의 경우 채권보유자를 포함한다.
32. 문화재 : 대한민국 법률 제9313호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에 따른 문화재를 말한다.
33. 물가변동비 : 총사업비 산정기준일인 2007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준공예정일까지 예상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부록 13(변경실시협약 재무모델)상의 물가변동비를 말한다. 단, 최초통행료 결정을 위한 물가변동비는 실제 준공시까지 발생한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물가변동비를 말한다.
34. 미보장차입(금) : 사업시행자의 자금차입 중 제47조의2(주무관청환수금 또는 주무관청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등)에 따른 주무관청지급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차입(또는 그 차입금)을 말한다.
35. 민간투자법 : 대한민국 법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말한다.
36. 민간투자법시행령 : 대한민국 대통령령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말한다.
37.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민간투자법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에 의하여 공고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말한다.
38. 법령 : 대한민국정부의 모든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말한다.
39. 법령등 : 법령 및 정부의 고시, 지침, 훈령 기타 정책을 포함한다.
40. 보장차입금 : 사업시행자의 자금차입 중 제47조의2(주무관청환수금 또는 주무관청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등)에 따라 주무관청이 지급하는 주무관청지급금에

의해 상환을 보장하는 차입(또는 그 차입금)을 말한다.

41. 보조금: 민간투자법 제53조(재정지원)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하나로서 법령등 및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무상환의 보조금을 말한다.
42. 본 도로 : 본 사업의 대상 도로시설로서 제3자 공고에서 특정된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으로부터 진접읍 내곡리구간 중 터널 및 교량 등으로 구성되는 총 연장 4.901km의 도로시설을 말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설치되는 영업소 및 도로관리소 등의 건축시설과 조경, 전기, 터널설비 등 도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43. 본 사업 : 제3자 공고 및 본 협약 제1조(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제2항 및 실시계획에 특정된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을 말한다.
44. 본 사업부지 :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서 특정되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부지를 말한다. 여기서 부지라 함은 토지, 공유수면, 수로, 지표, 지상 및 지하를 포함한다.
45. 본 사업시설 : 기존 실시협약에 따라 준공된 덕송-내각 고속화도로시설을 말한다.
46. 본 협약 : 본 사업에 관련하여 2023. **. **. 체결하는 변경실시협약을 말하며, 체결 이후 수정, 변경 및 개정된 내용을 포함한다.
47. 분기 : 해당연도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 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 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 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한다.
48. 분기별 정산대상이익금 : 어느 분기의 결산서상 매 사업연도별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른 영업수입이 본 협약 제39조(운영비용)에서 정한 금액과 해당 분기의 제세공과금(법인세비용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말한다.
49. 불가항력 사유 : 협약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본 협약 제57조(불가항력사유 및 처리)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사유를 말한다. 불가항력 사유는 본 협약 체결 당시 협약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나 사태(또는 상황이나 사태의 결합)로 인해 본 사업 및 본 사업시설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면서 협약당사자의 본 협약상의 무이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고, 협약당사자의 합리적 노

력이나 예방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하며,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 50. 비교재무모델 : 기준재무모델에 자금재조달 계획을 반영하여 작성된 재무모델을 말한다.
- 51. 사업계획서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2007년 12월 6일자로 주무관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말하며, 그 수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
- 52. 사업기간 :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53. 사업시행자 : 본 협약의 당사자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민간투자법, 동법시행령, 제3자 공고 및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덕송내각고속화도로주식회사를 말하며, 적법한 포괄 또는 특정의 승계인을 포함한다.
- 54. 사업연도 : 사업기간 중의 매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단, 사업개시년도의 경우에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종료년도의 경우에는 1월 1일로부터 실제로 운영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 55. 사업이행보증 : 본 협약의 이행을 보장하고, 본 사업시설의 적기 시공을 도모하고, 사업시행자가 시공 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납부 또는 제출하는 현금, 보증보험증권, 은행지급보증 등을 말한다.
- 56. 설계 : 기본설계, 실시설계와 이에 부속되는 시공도면을 총괄하는 의미를 말한다.
- 57. 소비자물가지수 : 한국은행이 간행하는 조사통계월보에 고시되는 지수로서 당해 시점이 포함된 월의 전 도시 소비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전 도시 소비자물가지수가 현재의 방식으로 더 이상 공시되지 않는 경우 협약당사자간에 합의하는 다른 지수로 대체된다.
- 58.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 : 2007년 10월 1일의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하고 여기에 본 협약에 따른 계산기준이 되는 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 환산하여 산출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분을 말하며, 본 협약에서 명시한 불변가격을 경상가격으로 환산할 경우에 적용한다.
- 59. 시공자 : 본 사업시설에 대한 공사를 담당하는 자로서 사업시행자로부터 본 사업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60. 시설물안전법 : 대한민국 법률「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말한다.
61. 실시계획 :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및 기존 실시협약에 따라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변경승인 포함)을 받은 본 사업의 실시계획을 말한다.
62. 실시설계 : 기본설계의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규모, 배치, 형태, 공사방법과 기간, 공사비, 유지관리 등에 관하여 세부조사 및 분석, 비교·검토를 통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 11(실시설계) 및 기본설계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08-74호)에 따라 작성되는 것을 말한다.
63. 연도별 조정통행료 : 본 협약 제45조(기준통행료 및 조정통행료, 징수통행료 등) 제3항에 따라 매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조정·확정되는 조정통행료를 말한다.
64. 영업수입 : 운영기간 동안 회계감사보고서상 통행료수익, 이자수익, 잡이익 중 부가통행료수익, 경미한 사업으로 인한 수입 등 본 사업 시행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모든 영업수입을 말하되, 본 협약 제 47 조의 2 (주무관청 환수금 또는 주무관청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등)에 따른 주무관청지급금 및 주무관청환수금은 제외한다.
65. 영업일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소재 금융기관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한다.
66. 운영개시일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개시일을 말한다.
67. 운영기간 : 운영개시일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68. 운영년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운영기간을 말한다. 다만, 최초 운영년도는 운영개시일로부터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하고 최종 운영년도는 사업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사업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69. 위험물 : 인화성, 발화성 등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른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동법상 위험물에 해당하는 수량과 관계없이 본 사업에 현저한 손해 또는 방해할 수 있는 정도의 물질을 의미한다.
70. 유지관리 : 본 사업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하며, 시간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 보수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71. 인·허가등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되어 정부, 주무관청 기타 관계기관 기타 제반공급을 제공하는 자가 행하는 허가, 동의, 인가, 승인, 승낙 등을 말한다.
72. 일 또는 날 : 오전 0시부터 시작하여 다음날 0시에 끝나는 연속적인 24시간의 기간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표준시를 기준한다.
73. 자(者) : 개인, 회사, 합작사, 법인, 공동투자회사, 조합, 신탁, 비법인 단체 또는 정부의 기관을 말한다.
74. 자금재조달(Refinancing) : 최근 금융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법인의 자본구조, 출자자 지분 및 타인자본 조달조건 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통해 출자자의 기대수익을 극대화하려는 행위를 말하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공고에서 규정한 자금재조달 관련 세부지침 및 조건에 따른다.
75.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발생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 증가분을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76. 자금차입(금) :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주단으로부터 차입하는 행위(또는 그 차입금)를 말한다.
77. 자금차입계약 :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에 따라 대주단과 새로이 체결하는 각종 대출약정 및 금융계약 등을 말하며, 자금차입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이나 자금차입계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자금차입계약을 포함한다.
78. 자본금 : 본 협약에 따라 출자자들이 사업시행자에게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79. 재무모델 : 부록 13(변경실시협약 재무모델)에 제시된 컴퓨터 프로그램 모델로서 대한민국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말한다.
80. 접속도로 : 본 사업 도로와 연결되는 4차로의 신설도로를 말하며, 덕송-상계 광역도로와 국지도 98호선중 내각-오남간 도로를 의미한다.
81. 정산기준금 : 기존 실시협약에 따라 2021. 11. 1.을 기준으로 추정한 해지시지급금(사업시행자 귀책사유)의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이 상호합의한 금액으로 부록 3(정산기준금 상각액과 수익금)의 정산기준금 상각액 및 정산기준금 수익금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을 말한다.
82. 정산기준금 상각액 : 정산기준일부터 2067년 2분기까지 특정 분기에 직전 분기 말의 정산기준금에서 상각되어야 할 금액을 말하며, 매분기 정산기준금 상

각액은 부록 3(정산기준금 상각액과 수익금)에 기재된 바와 같다.

83. 정산기준금 수익금 : 정산기준일부터 2067년 2분기까지 정산기준금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직전 분기 말까지 상각되고 남은 정산기준금에 기준사업수익률을 당해 분기의 초일부터 당해 분기의 말일까지 일할하여 곱한 금액을 말한다.
84. 정산기준일 : 본 협약에 따른 주무관청환수금 또는 주무관청지급금의 산정 개시 기준일이 되는 날로 2024년 1월 1일을 말한다.
85. 정산대상이익금 또는 연간정산대상이익금: 매 사업연도별 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른 영업수입이 본 협약 제39조(운영비용)에서 정한 금액과 제세공과금(법인세비용 등)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말한다.
86. 제반공급 : 본 사업시설에 공급되는 전기, 통신, 가스, 상수 및 유류 등의 제반공급을 말한다.
87. 제3자 공고 : 남양주시 공고 제2008-1605호(2008. 11. 13) 덕송-연평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를 말한다.
88. 제세공과금 : 본 사업에 대한 공사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공과금과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말한다.
89. 조정통행료 : 기준통행료에 2007년 10월 1일부터 정산기준일까지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조정한 통행료를 말한다.
90. 주무관청 누적 재정지원액 : 제 47 조 (정산대상이익금 정산의 원칙 등) 제4항에 따른 적립금 및 이자의 처리 시점까지의 정산기준금 상각액 및 수익금의 누적 합계에서 주무관청이 지급 받은 주무관청정산이익의 누적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91. 주무관청정산이익: 본 협약 제47조(정산대상이익금 정산의 원칙 등)에 따라 주무관청에 귀속되는 정산대상이익금을 말한다.
92. 주무관청지급금 : 해당 연도의 정산기준금이 같은 연도 주무관청정산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 협약 제47조의2(주무관청환수금 또는 주무관청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등)에 따라 산정하여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원을 말한다.
93. 주무관청환수금 : 해당 연도의 주무관청정산이익이 같은 연도의 정산기준금을

-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 협약 제47조의2(주무관청환수금 또는 주무관청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등)에 따라 산정하여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원을 말한다.
94. 준공 : 본 협약 및 실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한 건설을 완료하는 것을 말한다.
95.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상의 공정계획에 명시된 준공예정일을 말하며, 본 협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시 그 연장기간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96. 준공일 : 주무관청이 본 협약 제37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는 준공확인필증에서 준공사실을 인정한 날을 말한다.
97. 준공전 사용인가 :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법 제37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한 준공전에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용인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98. 준공확인필증 : 본 협약 제37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따라 주무관청이 발행하는 본 사업시설의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말한다.
99. 지방계약법 : 대한민국 법률 제942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100. 지장물 : 본 사업시설 공사의 시행을 현저히 방해 또는 지연시키는 유형물로서 수중, 지상 또는 지하 시설물을 말한다.
101. 징수통행료 : 최초 조정통행료 및 연도별 조정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요금 징수시 도로이용자에게 적용하도록 주무관청이 결정한 통행료를 말한다.
102. 착공일 :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착공보고서상에 기재된 공사개시일을 말한다.
103. 총사업비 :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총액이며,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2조(총사업비)의 규정에 따라 산정되며, 그 내역은 부록 2(총사업비)에 제시된 금액을 말한다.
104. 총투자비 : 총사업비, 물가변동비, 건설이자의 합계금을 의미한다.
105. 최초통행료 : 본 협약에 따라 운영개시일에 적용할 통행료를 말한다.
106. 추정교통량 : 본 협약 부록 4(추정교통량)에 명시된 추정교통량을 말한다.
107. 추정통행료수입 : 부록 6(추정통행료수입)에 명시된 특정 운영년도 통행료 수

입에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108. 출자자 :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출자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본 협약 제68조(출자 지분의 변경)에 따른 그의 적법한 포괄승계인 및 특정승계인을 포함한다.

109. 출자예정자 :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법인으로 설립되기 이전단계에서 법인 설립 후 출자자로 될 자로 예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110. 출자지분 : 각 출자자들의 지분을 말한다.

111. 통행료 :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설 중 도로시설의 통행차량으로부터 징수하는 민간투자법상의 시설이용자로부터의 사용료를 말한다.

112. 통행료수입 : 사업시행자가 실제로 징수하는 통행료의 총수입을 말한다.

113. 해지시지급금 :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원으로서, 본 협약 제62조(해지시지급금 산정)에 따라 산정한다.

114. 해지일 : 본 협약의 중도해지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또는 주무관청의 매수인정 통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말한다.

115. 협약당사자 :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본 협약에 따라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까지는 출자예정자를 포함)를 말한다.

제 4 조 (협약의 해석)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협약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해석된다.

- ① 본 협약상 모든 계약 및 협약에 대한 언급은 그의 수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 본 협약상 법령등에 대한 언급은 본 협약 체결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법령 등을 말하며, 그 개정 및 타 법령 등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② 본 협약상 단수 형태의 언급에는 복수 형태의 언급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③ 본 협약을 해석할 때 각 조항의 표제는 편의상 기재한 것일 뿐이어서, 계약의 일부가 아니며 해석상 기준이 될 수 없다.

- ④ 본 협약상 “포함한다” 및 “포함하여”는 “포함하나 이에 한정하지 않음”으로 해석한다.
- ⑤ “등”이라 함은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또한 “유사한” 또는 “관련되는 사항”을 포함한다.
- ⑥ 본 협약에서 조, 항, 호, 표 또는 별첨이 언급될 때에는, 명백히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본 협약에 들어 있는 조, 항, 호, 표 또는 부록을 의미한다.
- ⑦ 협약당사자 및 시공사, 감리자, 채권금융기관, 기타 본 협약상 어느 당사자에 대한 언급은 그들의 승계인 또는 양수인을 포함한다.
- ⑧ 본 협약상 주무관청에 대한 언급은 주무관청이 그 권한을 하부 행정기관 또는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 그 권한을 수임 또는 수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 5 조 (문서의 우선순위)

- ① 본 협약과 본 협약에서 언급된 기타 서류들은 본 협약에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그 전에 협약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의사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 ② 본 협약을 구성하는 문서들의 해석상 모호함 또는 불일치 점이 있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러한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을 해결한다.
 1. 민간투자법
 2. 민간투자법시행령
 3. 제3자 공고
 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 2 장 기본 약정

제 6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무관청은 덕송내각고속화도로 주식회사가 민간투자법, 같은 법 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기존 실시협약에 따라 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음을 확인한다.

제 7 조 (사업시행자의 권리)

-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설정, 부여한다.
 1.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설계 및 건설
 2. 본 사업부지 내에 국·공유 재산을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까지 무상으로 사용. 다만, 공익적 목적 등의 사유로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는 한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용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3.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무상사용 · 수익
 4.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및 통행료의 부과, 징수
- ②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무관청은 본 사업기간 동안 제1항에 정한 사업시행자의 자격, 권한 및 권리를 철회, 취소, 박탈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 8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등을 준수하고 본 협약이 정한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무를 지며,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유지관리 및 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설계, 공사, 유지관리 및 운영, 자금조달, 기타 본 협약의 이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협약에서 규정한 위험을 부담한다.
- ③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제시한 채

권금융기관 등의 대출의향서 또는 조건부 대출확약서를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12개월까지 대출약정서로 변경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업을 본 협약에 따라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의 2 (건설출자자의 기존 차입금액 상환의무)

- ① 사업시행자는 효력발생일 이후 10 영업일 이내에 기존 자금차입원리금을 전액 상환한다. 단, 사업시행자는 효력발생일 이후 10 영업일 이내에 기존 자금차입원리금의 전액 상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상환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자금차입원리금 중 상환되지 않은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3조(용어의 정의) 제1항 제5호의 건설출자자로 하여금 해당 잔액을 상환 또는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제 9 조 (소유권의 귀속)

- ①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준공과 동시에 주무관청에 귀속된다.
- ② 본 협약이 중도해지되거나 매수청구에 따라 매수되는 경우 또는 기간만료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모든 권리, 권한과 시설 자산(설비 및 지적재산 포함)의 귀속은 본 협약 제10장(협약의 종료)의 규정에 따른다.
- ③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준공 이후 이를 주무관청에 기부채납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당해 부가가치세 납부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본 협약이 정한 조건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가진다.

제 10 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본 협약에 따른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운영개시일부터 2067년 4월 13일까지로 한다.

제 11 조 (협약의 성신행)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 등을 준수하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 3 장 총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제 12 조 (총사업비)

총사업비는 부록 2(총사업비)와 같이 2007년 10월 1일 불변가격 기준 금1,649억원으로 한다. 총사업비는 본 협약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다.

제 13 조 (총사업비의 변경)

-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에서 결정된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1. 건설기간중 물가변동률을 현저하게 상회하거나 하회하는 공사비 등의 변동
 2.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3. 공사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경우 및 기타 주무관청의 요구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 가. 주무관청이 (i) 본 도로의 선형변경, (ii) IC 또는 JCT의 형식, 위치 변경을 요청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의 내용을 변경토록 요청하는 경우

나. 공사관련 시방서, 정부가 제정하는 설계기준, 설계규칙 및 지침(한국도로공사의 설계기준 포함)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주무관청이 요청하여 총사업비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다. 공사책임감리계약을 위한 입찰 및 공사비 변경에 따른 감리비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및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이 증감되는 경우, 문화재발굴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라. 교통·환경영향평가 및 인허가 기관의 요구내용 중 주무관청이 인정하여 공사비가 증감하는 경우

마.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5. 가격산출기준일로부터 실제 보상이 완료되는 날까지 본 사업부지의 가격상승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상비가 증감하는 경우

② 총사업비의 변경은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 제57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의 사유를 적용 또는 준용하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부담분은 총사업비 변경 부분에서 제외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투자법, 지방계약법,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본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법령에 (“관련 법령”) 따라 그 산출근거를 전문기관의 확인을 거쳐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사업비 변경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총사업비 중 공사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감리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에 의하여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통행료 조정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으로 해당 사유의 해소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에 의해 통행료를 조정하거나 관리운영권설정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사업비의 변경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본 협약 제12장(분쟁의 해결)에 따라 해결한다.

⑥ 총사업비중 보상비가 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증가하는 경우 제5항의 규정에도 불

구하고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처리한다.

1. 사업시행자가 스스로의 창의적인 노력에 의하여 공사비를 절감한 부분이 있는 경우 이를 보상비 증가액에 우선 충당하기로 한다.
2. 제1호에 의하여 충당하여도 해결하지 못한 보상비 증가액이 있는 경우 이는 통행료를 조정하거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조정하여 처리하기로 한다.

제 4 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제 14 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본 협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은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추진하며 본 협약 체결 이후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 15 조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 ① 사업시행자는 총투자비의 1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하여야 한다.
- ② 본 협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서 정한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출자(예정)자로 하여금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상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출자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동 자금조달계획은 주무관청의 사전승인 하에 변경될 수 있다.
- ③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동안 제2항의 투입일정에 따라 적기에 자기자본을 납입하여야 하며 준공시점에 총투자비의 15% 이상이 자기자본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운영기간 중의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16 조 (자금차입)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시 합의된 최초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채권금융기관 등 대주단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타인자본의 조달을 의미한다)하여야 하고, 본 협약 체결시 합의된 최초 자금조달계획과 달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대주단 등에게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에게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금차입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포함한 담보약정에 관한 제반서류들을 제출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검토한 결과 본 협약이 정한 바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 근저당권 설정을 승인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대주단 등과의 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사유의 발생 등으로 채권금융기관 등이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장 설계 및 건설에 관한 사항

제 17 조 (설계, 인허가 등)

-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 시에 제3자 공고, 사업계획서 및 본 협약, 관련 법령등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계획서는 본 협약 체결시 실시설계 수행을 위해 보충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종 인·허가등 및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본 도로에 교통체계효율화법령 등 ITS 관련기준을 반영하여 교통관리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에 본 도로의 교통정보를 제공한다.

제 18 조 (실시계획의 승인)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8조(실시계획의 승인)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주무관청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 협약,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합의한 결과가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 통지한다.
- ③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승인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본 협약,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합의한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할 경우 그 신청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정하여 수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사전승인 없이는 본 협약상 공사비를 초과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없다.
- ④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기조달한 자금 또는 기투입한 비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⑤ 제2항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실시계획의 시행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주무관청에 이전되지 않는다.

제 19 조 (공사비)

공사비는 부록 2(총사업비)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07년 10월 1일 불변가격 기준 금 1,105억원으로 한다.

제 20 조 (공사기간)

- ① 본 사업시설의 공사기간은 공사착수일로부터 42개월로 한다.
- ② 본 협약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의거 공사기간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한 경우 그에 상응한 만큼 제1항의 공사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한다.
- ③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기타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공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 21 조 (공사의 착수)

-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신청관련 업무를 적기에 완료하여 본 사업시설의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본 협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공사착수일은 접속도로의 준공일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③ 사업시행자는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확인받은 착공보고서를 공사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 협약을 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 22 조 (공정관리)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진도율 및 기성관리 등 공정이 적절히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매월 및 매분기 별로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공정관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자가 확인한 공사추진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매년 11월말까지 건설사업관리자가 확인한 본 사업시설 공사의 전체 공정 및 차기년도 예정 공정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과 착공일로부터 분기별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실적 누계공정률이 누계 계획공정률 대비 90% 미만인 경우 부진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확인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공정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정계획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조정된다.

제 23 조 (설계, 공사의 도급)

- ① 사업시행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직접 설계 또는 시공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출자자 또는 본 사업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설계자, 시공자와 본 협약 및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설계, 공사의 수행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즉시 도급계약의 체결결과 및 증빙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제3자 공고 및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수급인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

제 24 조 (관련 법령 등의 준수)

- ① 사업시행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으로 하여금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수급인이 본 사업시설의 설계 또는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건설사업관리자는 시공자 및 하수급인이 본 사업시설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하는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 등은 관련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 25 조 (도급 ·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 ① 사업시행자는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체불노임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공사도급관련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②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도급 · 하도급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1항의 체불노임 등 수급인에 대한 제반 채무의 변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의 시정명령을 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의무사항을 설계자, 시공사 또는 하수급인이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 협약상의 자신의 의무, 채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
- ④ 주무관청은 설계자, 시공사 또는 그 하수급인에 대하여 설계, 공사의 도급계약 또는 그 하도급계약으로부터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제약도 받지 아니한다. 다만, 본 협약의 해지시 주무관청에 의한 관련 계약 승계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 26 조 (위험물 및 지장물)

-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본 사업시설의 기능 및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지상·지하 위험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고 그 이설여부 및 공사방법 등을 판단하여 관련사항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실시계획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위험물 또는 지장물이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를 즉시 주무관청에 통지하고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령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위험물의 제거 또는 중화 및 지장물의 이설 등에 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합리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발견할 수 없었던 위험물이나 지장물의 발견으로 인

한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본 협약 제57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제1항에 따른다.

제 27 조 (문화재)

- ① 사업시행자는 문화재 관련 법령등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부지 내에서 문화재를 발견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 법령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③ 문화재 발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선 조달하고 주무관청은 이를 정산하여 총사업비로 반영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의 합리적인 조사에도 불구하고 발견할 수 없었던 문화재의 발견으로 인한 처리비용에 대해서는 본 협약 제57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제1항에 따른다.

제 28 조 (사업이행보증금)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른 사업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금에 준하는 본 사업 시행에 대한 지급보증서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에서 규정하는 기관의 지급보증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존 실시협약에 따라 기 제출된 사업이행보증서가 있는 경우 그 사업이행보증서로 보증되는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지급보증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
- ② 제1항의 지급보증서 또는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이 대표출자자 또는 설립예정법인 명의로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법인설립 즉시 그 명의를 신규 설립법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로 본 협약이 중도해지되거나 본 사업시설이 매수되는 경우, 본 사업시설에 대한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는 경우,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현금,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 ④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주무관청이 본 협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사업이행보증금

은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가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지급보증서)을 제출한 경우 그 조건에 따라 주무관청은 보험금(또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제1항의 사업이행보증금 대상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된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추가로 제1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납부하거나, 기 제공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증권을 대체하여 주무관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 29 조 (지체상금)

- ①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본 사업시설의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연장기일 포함)을 초과하여 준공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7호(08.03.11)인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51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1항 제3호 소정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시 그 기간이 반영된 준공예정일) 다음날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준공일까지의 지체상금을 주무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상 계약금액은 총사업비(기성부분 해당 금액은 제외)로 본다.
- ②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준공하지 못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 협약을 해지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기타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 규정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이행보증금은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가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지급보증서)을 제출한 경우 그 조건에 따라 주무관청은 보험금(또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제 30 조 (보험가입)

- ① 사업시행자는 부록 10(보험내역)에 따라 보험에 직접 가입하거나 시공사 등으로 하여금 당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들 보험이 사업기간 동안에 유효하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보험계약서 및 관련 목록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계약의 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를 주무관청에 즉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가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보험금 수령내역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보험금은 당해 보험사고의 치유를 위하여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내역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담하게 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 31 조 (주무관청의 감독)

-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실시공 방지, 공사의 원활한 시행 또는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사업시행자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상황, 품질관리 등에 대하여 매월 1회 주무관청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동안에 본 사업시설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건설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 규정된 본 사업시설에 대한 검사를 책임감리자와 합동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사업시행자는 검사의 방법, 내용, 시기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제3항의 검사의 결과, 본 사업시설이 본 협약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건설되지 않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할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소요되는 비용 중 주무관청의 감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의 조사 및 시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각각 부담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본 협약 제55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업무감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위탁 등을 통해 전문가(전문기관) 등의 조력을 받게되는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 32 조 (기성검사)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의 공사기성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자에 의한 기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건설사업관리자는 기성검사 완료 후 15일 이내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33 조 (민원처리)

-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사업민원 : 본 사업의 부지 및 지장물의 매수 또는 보상과 관련된 민원이나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3자가 누리고 있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됨으로서 발생하는 민원으로 제2호를 제외한 민원
 2. 시공 및 운영민원 : 소음, 악취, 진동, 분진, 교통장애, 기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민원
- ② 사업민원은 주무관청의 책임하에 처리하며(단, 부지 및 지장물 관련은 행정적 처리에 한함), 시공 및 운영민원은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처리하며 사업시행자는 시공민원에 대한 사전 예방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업민원으로서 주무관청의 보상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민원이 발생하여 본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동 민원의 해결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기로 하며, 협의 결과 총사업비의 변경으로 동 민원을 해결하기로 한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동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을 총사업비에 추가 반영하기로 한다.
- ④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법령등, 관계기관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위배되는 사업시행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의 해결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배상금 등은 사업시행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제 34 조 (환경 및 안전관리)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및 관련 법령등에서 규정한 사항과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서 제시한 환경관리, 안전관리 및 긴급 구난대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시공을 위한 안전관리조직을 갖추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등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자로부터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 중 주무관청이 협약 및 관련 법령등에 따라 안전점검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무관청은 이를 직접 시행하고 그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 35 조 (공사책임감리)

- ① 주무관청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등에 따라 적격업체인 건설사업관리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선정한 건설사업관리자와 공사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건설사업관리자로 하여금 본 사업시설 공사에 대하여 본 협약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등에 따른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건설사업관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을 감독한다.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요구하는 방법에 의거 공사감리실적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감리비를 지급한다.
- ③ 건설사업관리자는 공사책임감리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감리업무의 실시체계, 공사에 대한 검사 등을 포함한 제반 감리업무의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에게 감리업무현황을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건설사업관리자는 본 협약 제31조(주무관청의 감독)에 따른 검사, 제32조(기성검사)

에 따른 기성검사, 제36조(예비준공검사 등)에 따른 예비준공검사, 제37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따른 준공검사 등을 수행하고, 검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총사업비 중 책임감리비 지급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지급하여야 한다.
- ⑥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그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책임감리와 관련된 본 협약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⑦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본 협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을 연장시, 이로 인한 책임감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되 그 추가비용은 총사업비 증가없이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주무관청 귀책사유 및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시, 이로 인한 책임감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본 협약 제9장(위험분담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위험배분원칙에 따른다.

제 36 조 (예비준공검사 등)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을 완공하기 90일 전까지 건설사업관리자가 작성한 사회 기반시설 예비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예비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그 내용을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사업시행자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동 미비사항을 보완한 후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준공확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본 사업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④ 조기준공에 대한 예비준공검사에 대하여도 제1항 및 제2항, 제3항 규정을 준용한다.

제 37 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완공 후 건설사업관리자가 확인한 본 사업시설 공사

의 준공조서를 첨부한 공사 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준공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직접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완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완공검사의 일정을 통지하고, 주무관청은 완공검사에 입회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가 접수된 경우, 주무관청은 동 신청을 접수한 후 14일 이내에 민간투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본 협약의 위반한 점이 없고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사용 및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다.
- ④ 제3항의 준공검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의 시운전(성능테스트)을 실시하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위해 검사의 입회, 현장설명,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본 협약에 따라 관리운영권의 등록,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일 등 기타 필요한 사항들을 확정하여야 한다.
- ⑥ 주무관청은 준공확인 결과 본 협약 또는 실시계획 승인시의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를 경유하여 공사준공보고서를 반려하고, 구체적인 미비점을 명확히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반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⑦ 사업시행자는 제6항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보완한 이후에 신속하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8 조 (조기준공)

본 협약상 준공예정일 이전에 본 사업시설이 준공된 경우(“조기준공”) 준공일로부터 무상사용으로 간주하며, 그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도 개시되는 것으로 한다.

제 6 장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 39 조 (운영비용)

- ① 본 사업의 총 운영비용은 2007년 10월 1일 불변가격 기준 금 174,130백만원이며, 연도별 부문별 운영비용 내역은 부록 7(운영비용)과 같다.
- ② 매년도 또는 매분기 운영비용은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분기별 결산서상의 비용을 기준으로 다음의 ㉠-㉡+㉢의 금액으로 산정하되, 제1항의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 ㉠ 손익계산서 상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또는 영업비용)
 - ㉡ 손익계산서 상 유형·무형자산상각비 등 현금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상각비 성격의 비용
 - ㉢ 현금흐름표 상 유형·무형자산 구입비
- ③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경영목적에 따라 해당년도의 기준운영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부문별 운영비용을 상호 전용하거나 통합 사용할 수 있다. 단, 대수선비용은 상호 전용 또는 통합 사용할 수 없으며, 대수선 계획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대수선 주기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대수선비용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6개월 이전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사업의 유지보수비 등 실제 운영비용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운영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증감하는 경우 통행료,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1. 본 사업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와 관련된 법령, 법인세 등 세제 또는 정부 정책의 변경이 있는 경우
 - 2. 주무관청의 요구사항의 이행으로 인한 경우
 - 3.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기타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 ⑤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서 규정한 사유의 발생을 근거로 부록 7(운영비용)에 규정된 운영비용을 변경할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무관청은 승인시 법령등의 변경 등으로 인한 운영비용 절감여부를 고려한다.
- ⑥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효율적 경영으로 운영비용이 절감되더라도 이를 이유로 통행료의 인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단축, 운영비용 절감액의 환수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관련 법령의 변경 등 사업시행자의 노력과 관계없는 사유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절감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40 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 계약)

- ① 사업시행자가 유지보수 및 운영을 제3자에게 대행시키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자 또는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
-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위탁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하 “관리수탁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 및 본 협약을 준수하게 하여야 하며, 불가항력 상황 등에 대비하여 가입한 보험을 유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해당업무를 관리수탁자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본 협약 규정에 의거 부여된 사업시행자의 의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되거나 감경되지 않는다.

제 40 조의 2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 의무)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시설을 유지, 보수,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긴급유

지보수 등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이 직접 시행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③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유지보수 및 관리의 태만 등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에 상당한 결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보수, 개량, 개축 등을 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위험을 발생시킬 하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위험요인을 치유할 수 있는 보수 또는 개량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 완료된 때에는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이행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41 조 (운영실적의 제출)

- ① 사업시행자는 매년 2월 28일까지 주무관청에게 본 도로에 대한 전년도 교통량 현황 및 통행수입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주무관청은 교통량 현황 및 통행료수입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약당사자간의 합의로 선정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이를 조사,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조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 42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 ① 사업시행자는 「유료도로법」 등 관련 법령과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관한 5년 단위의 중기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이하 “**유지관리계획**”이라고 한다)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본 협약 효력발생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유료도로법」 등 관련 법령과 본 협약 및 제1항의 유지관리계획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유지관리시행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하고, 「유료도로법」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유지관리시행계획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계획서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관련 법령등의 변경등 합리적인 사유로 인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제 43 조 (경미한 사업)

-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투자법 제14조(민간투자사업법인의 설립)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내용 및 소요비용과 예상수입, 사업추진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미한 사업을 시행한 경우 매 사업연도 회계감사보고서상에 해당 경미한 사업의 시행에 따른 비용과 수입 등을 표시·기재하고, 매년도 3월말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경미한 사업의 시행실적을 주무관청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가 본 조에 따른 경미한 사업을 통해 얻은 매 사업연도의 수입은 본 협약 제47조(정산대상이익금 정산의 원칙 등) 제5항에 따른 ㉠ 실제 영업수입에 포함한다.

제 7 장 사업수익률 및 통행료

제 44 조 (기준사업수익률)

- ① 기준사업수익률은 고정수익률과 변동수익률로 구분하며, 정산기준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제2항의 고정수익률로 하고, 정산기준금의 나머지 50%에 해

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제3항의 변동수익률로 한다.

- ② 제1항의 고정수익률은 본 협약 효력발생일 직전 20영업일 동안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국고채 5년 만기 채권 민간채권 평가기관 평균수익률을 산술평균한 비율에 가산금리 연 0.80%를 더한 비율로 하며, 소수점 3자리 이하의 숫자는 반올림한다. 다만, 보장차입금 자금재조달에 의하여 보장차입금의 이자율이 변동될 경우, 기준사업수익률은 이에 연동하여 변경된다.
- ③ 제1항의 변동수익률은 매 1년 단위로 변경되는 것으로 하고, 본 협약 효력발생일과 그로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의 각 직전 20영업일 동안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국고채 5년 만기 채권 민간채권평가기관 평균수익률을 산술평균한 비율에 가산금리 연 0.92%를 더한 비율로 하며, 소수점 3자리 이하의 숫자는 반올림한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효력발생일이 포함된 해의 다음 연도부터는 효력발생일이 포함된 분기의 경우 효력발생일과 같은 날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직전연도에 결정된 변동수익률을 적용하고,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에 결정된 변동수익률을 적용한다.
- ④ 제3항의 국고채 5년 만기의 잔존만기별 수익률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 만기가 5년 이상인 국고채 중 5년에 가장 가까운 만기를 가진 국고채의 민간채권평가기관 평균수익률을 기준으로 변동수익률을 결정하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변동수익률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제12장(분쟁의 해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변동수익률을 결정한다.

제 45 조 (기준통행료 및 조정통행료, 징수통행료 등)

- ① 본 사업의 기준통행료는 부록 5(차종별 기준통행료)에 정한 바와 같고, 본 사업시설의 추정교통량 및 추정통행료수입은 부록 4(추정교통량) 및 부록 6(추정통행료수입)과 같다.
- ② 사업시행자는 조정통행료의 결정을 위하여 운영개시일 60일 전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본 사업시설의 이용방법 및 운영개시일에 적용될 실제 최초통행료
 - 2. 통행료산출 기초자료

3. 통행료 징수방법

4. 통행료의 감면 또는 할증률 및 그 대상

5. 유사시설의 통행료 수준 등

6. 기타 통행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본 협약 체결 이후 연도별 조정통행료는 매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연 1회에 한하여 조정하며, 사업시행자는 매 사업연도의 연도별 조정통행료를 직전년도 7월 1일부터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의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해 주무관청에 매년도 8월말까지 제출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승인함으로써 연도별 조정통행료가 확정된다.
- ④ 주무관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최초 통행료 및 연도별 조정통행료와 주무관청의 정책환경 등을 고려하여 실제 요금징수시 도로이용자에게 적용할 징수통행료를 결정한다. 이 경우 통행료 징수방식의 변경에 의하여 100원 단위 미만으로 징수할 수 있게 되지 않는 한 제4항의 징수통행료는 원칙적으로 100원 단위로 사사오입하여 결정한다.

제 46 조 (통행료의 징수)

- ① 사업시행자는 제10조(관리운영권 설정기간)에 따른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까지 본 사업시설을 사용하는 이용자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할 배타적 권리를 갖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45조(기준통행료 및 조정통행료, 징수통행료 등) 제4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결정한 징수통행료를 적용하여 통행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유료도로법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에 의한 통행료의 감면대상차량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차량 및 감면비율), 동법 시행규칙 제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의 규정에 의한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는 등 불법적 사용에 대한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주무관청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사업시행자는 해당 통행료를 지급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해당 통행료에 추가하여 유료도로법이 적용하고 있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주무관청

은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한다.

제 46 조의 2 (통행료 미인상 또는 인하에 따른 차액의 처리 등)

- ① 주무관청이 제45조(기준통행료 및 조정통행료, 징수통행료 등)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조정통행료에도 불구하고 징수통행료를 결정함에 있어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반영하지 아니함(이하 “**미인상 결정**” 이라고 한다)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매 분기별 실제 통행료 수입이 적게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그 차액을 다음 분기 마지막 월의 25일까지(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사업시행자는 그 지급액을 본 협약 제47조(정산대상이익금 정산의 원칙 등) 제5항에 따른 “㉠ 실제 영업수입”에 반영하여 주무관청정산이익을 산정한다.
- ② 주무관청이 제1항의 미인상 결정 이외의 사유로 연도별 조정통행료보다 낮게 징수통행료를 결정함(이하 “**인하 결정**” 이라고 한다)으로써 사업시행자의 매 분기별 실제 통행료 수입이 적게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그 인하 결정으로 인한 수요 변동 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 차액의 보전 방법 및 보전액, 보전시기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 ③ 주무관청이 제1항에 따른 차액보전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미보장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을 지연이자율로 적용하여 계산되는 지연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 46 조의 3 (통행료 정산)

- ① 본 도로와 연계된 도로구간과 통행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한국도로공사 등 연계도로의 운영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통행료징수 및 정산방법 등을 정하도록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의 2 정산대상이익금, 환수금 및 지급금 등에 관한 사항

제 47 조 (정산대상이익금 정산의 원칙 등)

- ① 본 협약에 따른 정산대상이익금의 정산 기간은 정산기준일부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정산대상이익금의 예상 산정액은 부록 9(정산대상이익금 산정)와 같다.
- ② 제1항의 기간 중 매 분기 정산대상이익금 중 부록 8(정산대상이익금 정산 비율)에 따라 산정한 사업시행자 정산분 외에 나머지는 전액 주무관청에 귀속된다. 다만, 본 협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정산대상이익금은 해지의 귀책사유가 없는 당사자에게 전액 귀속하되, 협약당사자 모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부록 8(정산대상이익금 정산 비율)의 비율에 따른다.
- ③ 교통량 증가 등의 사유로 해당 분기의 정산대상이익금 중 사업시행자 정산분이 그 분기에 사업시행자가 상환한 미보장차입금원리금액보다 큰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잔액을 자금차입계약상의 별도 계좌에 적립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른 적립금을 미보장차입금원리금의 상환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단, 그 상환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적립금 및 그 이자는 매 5년 마다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되, 5년 단위로 기간이 누적됨에 따라 주무관청 누적 재정지원액이 달라지는 경우 그에 따른 사업시행자 귀속분의 조정 방법은 양 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1. 주무관청 누적 재정지원액이 ‘0’ 이상인 경우: 전액 주무관청 귀속.
 2. 주무관청 누적 재정지원액이 ‘0’ 미만인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에게 50:50으로 귀속.
-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기간 동안 매 분기 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전 분기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 실제 영업수입, ㉡ 실제 운영비용, ㉢ 실제 납부 제세공과금(법인세비용 등), ㉣ 주무관청정산이익을 각 산정하여 그 내역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주무관청은 제5항에 따른 내역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47 조의 2 (주무관청환수금 또는 주무관청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등)

- ① 제47조(정산대상이익금 정산의 원칙 등) 제6항에 따른 승인 통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분기의 마지막 월의 5일까지 아래 산식에 따라 해당 분기의 주무관청환수금 또는 주무관청지급금을 산정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1. 해당 분기의 주무관청환수금 = 직전분기(해당 분기의 1분기 전) 주무관청정산이익 - (해당 분기의 정산기준금 수익금 + 상각액)
2. 해당 분기의 주무관청지급금 = (해당 분기의 정산기준금 수익금 + 상각액) - 직전분기(해당 분기의 1분기 전) 주무관청정산이익

※ 위 산식에서 “주무관청정산이익”은 제47조(정산대상이익금 정산의 원칙 등) 제5항 “㉠ 주무관청정산이익”을 의미하고, “정산기준금 수익금”과 “상각액”은 부록 3(정산기준금 상각액과 수익금)에 따라 산출한다

- ② 사업시행자 또는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산정·제출된 해당 분기의 주무관청환수금 또는 주무관청지급금을 해당 분기의 마지막 월의 25일까지(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까지) 상대방에게 각 지급한다. 단, 정산기준일부터 효력발생일까지 기 발생한 주무관청환수금 또는 주무관청지급금은 효력발생일이 있는 분기를 기준으로 다음 분기 마지막 월의 25일까지(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까지) 지급하고, 관리운영기간 만료일이 포함된 분기의 주무관청환수금 또는 주무관청지급금은 해당 분기의 말일까지 상대방에게 각 지급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주무관청환수금 또는 주무관청지급금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을 완료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기준사업수익률을 지연이자율로 적용하여 계산되는 지연이자를 원금에 가산하여 지급한다.
- ④ 제1항의 계산방식으로 인해 정산기준금이 전액 상각되는 시점까지 주무관청정산이익 미정산 잔액이 존재할 경우 해당 미정산 잔액은 사업시행자가 청산종결 시점까지 주무관청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 47 조의 3 (주무관청환수금 또는 주무관청지급금의 검증 및 정산 등)

- ① 사업시행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선정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하여, 회계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제47조(정산대상이익금 정산의 원칙 등) 제5항 및 제47조의2(주무관청환수금 또는 주무관청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등)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산정 내역을 검증하고 그 주무관청환수금 또는 주무관청지급금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그 검증에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검증보고서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매년 2분기 주무관청환수금 또는 주무관청지급금을 지급할 때 제47조의2(주무관청환수금 또는 주무관청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등)에 따라 기지급 받았거나 기지급한 직전년도 주무관청환수금 또는 주무관청지급금과 검증보고서에 따른 주무관청환수금 또는 주무관청지급금의 차액을 정산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검증보고서는 관리운영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운영기간이 만료되는 사업연도 및 직전 사업연도의 주무관청환수금 또는 주무관청지급금의 정산은 관리운영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한 분기의 말일(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영업일까지)까지 처리한다.
- ④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은 제2항에 따른 차액 정산 이외의 목적으로는 주무관청환수금이나 주무관청지급금을 상대방에 대한 채권액과 상계하거나 공제할 수 없다.
- ⑤ 다만 제 46 조의 2(통행료 미인상 또는 인하에 따른 차액의 처리 등)에 따라 주무관청이 미인상 결정 또는 인하 결정을 하여 차액보전이 이루어진 분기가 속한 사업연도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선정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직전년도 통행료수입이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그 통행료수입 검증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7 조의 4 (정산기준금 상각액의 조기 상각)

- ①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조건 및 절차 등에 따라 정산기준금 상각액을 조기에 상각시킬 수 있다.
 1. 주무관청은 조기 상각을 하려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매 분기 주무관청지급금 지급일 20일 이전까지 서면으로 그 조기 상각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주무관청이 조기에 상각할 수 있는 최소 금액은 금일억원(₩100,000,000) 이상이어야 하고, 금일억원(₩100,000,000) 단위로 상각해야 한다.
 3. 주무관청은 조기 상각 하려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주무관청지급금을 지급하는 날에 조기에 상각할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사업시행자가 위 제3호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으로 자금차입계약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조기에 상환하기 위하여 조기상환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위 제3호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과 함께 위 조기상환수수료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조기 상각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만큼 부록 3(정산기준금 상각액과 수익금)에 기재된 마지막 분기의 정산기준금부터 역순으로 상각된 것으로 보며, 조기 상각된 정산기준금 상각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로부터 정산기준금 수익금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제 8 장 주무관청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 48 조 (행정적 지원)

- ① 본 사업시설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 실시설계에 대한 기술심의 등의 필요한 행정절차(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을 포함)는 주무관청이 추진하며, 본 사업시설의 공사와 관련된 인·허가등은 사업시행자가 추진하며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이에 협조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 행정지원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시행자의 의무인 사항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않는다.

제 49 조 (사업부지의 제공)

- 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부지의 소요계획과 보상일정 및 부지의 인도일정에 대하여 사전 협의한다.
- ② 주무관청은 실시계획 및 공정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본 사업부지를, 이의 보상이 필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시계획 승인 후 즉시, 이의 보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절차가 완료된 후 즉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이 본 사업부지를 제공함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동안 제세공과금 및 담보권의 부담 없이 부지에 대한 점유권, 무상사용권 및 기타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부지에 대한 점유권, 무상사용권 및 기타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권리를 취득하고 행사함에 있어 어떠한 법적, 사실적 부담, 제약이 있는지 사전에 법률 실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실사결과 발견된 법적, 사실적 하자를 지체없이 주무관청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체결 당시에 자신에게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세공과금 등을 조사하여 총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하며, 누락된 제세공과금이 추후에 발견되는 경우에 그 제세공과금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본 협약 체결 당시 제세공과금 관련 법령등이 없었던 경우 또는 제세공과금 관련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제세공과금의 액수를 산정할 수 없었던 경우 등 본 협약 체결 당시에 사업시행자가 제세공과금 등을 조사하여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없었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기본설계 및 실시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제2항에 의한 본 사업부지의 제공시점 이전이라도 사업시행자가 부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 ⑥ 주무관청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없이 본 사업부지를 처분하거나 기타 다른 권리를 설정할 수 없으며 주무관청이 공공의 목적으로 본 사업부지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⑦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용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도 본 사업부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익적 목적등의 사유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본 사업부지가 사업시행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경우 그 지연기간에 상응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된다.

제 50 조 (보상업무)

본 사업부지에 속하는 토지, 물건, 영업권 기타 손실보상의 처리는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부담으로 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보상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사업시행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기로 한다.

제 51 조 (접속도로시설의 적기준공)

-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주무관청의 책임과 부담하에 본 사업의 접속도로시설을 적기에 준공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접속도로시설의 미비로 본 사업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사업시행자의 통행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협약상 당해 접속도로시설의 예상수요에 해당하는 통행료수입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거나 동 금액에 대신하여 통행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조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접속도로시설의 적기 미준공에도 불구하고 실제 교통량이 협약상 추정통행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2 조 (삭제)

제 53 조 (수요위험의 처리)

본 시설의 이용에 따른 실제 발생수요가 본 협약에서 정한 본 시설의 예측수요와 차이

가 있을 경우 본 협약에서 이에 관해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이로 인한 책임과 위험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

제 9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 54 조 (위험배분의 원칙)

-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은 당해 위험에 대한 귀책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②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의 경우 일차적으로는 관련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각각의 분담비율을 정하기로 한다.
- ③ 제2항에 의거 각 사유의 성격에 따른 위험분담비율을 정함에 있어 당해 사유의 발생이 어느 협약당사자의 행위 또는 권한 및 지배범위에 근접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

제 55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

- ① 다음 각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보나, 이들 사유에 한정되지 않는다.
 1. 사업시행자가 법령 또는 본 협약에 정한 사항들을 위반하거나 민간투자법 제46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따른 주무관청의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사업시행자가 법령 등에서 규정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안전관리, 시설 관리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원의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4. 사업시행자가 해산 및 청산을 결정한 경우(합병을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나 불가항력적 사유 이외의 사유로 본 사업을 위한 재원(자

기자본 및 타인자본)의 조달·투입이 실현되지 않음으로 인해 본 사업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본 사업의 수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본 사업시설의 운영을 3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중단하는 경우
7. 본 협약에 명시된 사업시행자의 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한 경우
8. 사업시행자가 신의성실에 반하는 관리운영으로 주무관청정산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9.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지급하여야하는 채무(주무관청환수금 등)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10. 사업시행자가 수령한 주무관청지급금을 차입원리금 상환이 아닌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추가비용이나 수입손실에 대하여는 총사업비의 변경 또는 운영비의 변경, 그 밖에 추가비용이나 수입손실 등에 대한 보상이나 배상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 56 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

다음 각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보나, 이들 사유에 한정되지 않는다.

1.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무관청이 본 사업시설, 본 사업시행권에 대하여 몰수한 경우
2. 주무관청지급금의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의 자금차입계약상 기한의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여 대주단으로부터 대안제시 요구 공문을 수신한 경우
3. 본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과 관련된 인허가 협의의무를 포함한 행정처리 지연 등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에 정한 주무관청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제 57 조 (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

① 사업기간 중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로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태풍, 비행기충돌 등으로 인한 재해
2. 전국적 또는 사회 산업전반의 파업
3. 국가신용도, 이자율, 환율 등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동 및 본 사업환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자금차입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4.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기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정책의 변경이 사업시행자에게 직접적이고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다만, 정부의 요구나 방침 등으로 인하여 본 협약에 따라 결정된 통행료 보다 낮은 수준의 통행료를 징수하게 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주무관청의 책임으로 함.
5. 제2항에 정한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된 사유로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유로서 1호 내지 4호에 준하는 사유

②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 중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사변, 적국의 침공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2. 핵폐기물, 화학 또는 방사능에 의한 부지의 오염
3.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4. 환전 및 해외송금 통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③ 사업기간 중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 한다.

1.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운영손실분(복구비용과 통행료 수입의 손실분을 합한 금액을 의미함)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처리한다.

가. 비정치적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주무관청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실제 발생한 손실의 80% 한도 내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 결정하여 부담하기로 한다.

나. 정치적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 주무관청은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실제 발생한 손실의 90% 한도 내에서 사업시행자와 협의 결정하여 부담하기로 한다.

다. 위 가목 및 나목에서의 보험은 본 협약에서 정한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실제 수령하는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2. 제1호 각 목에 따라 주무관청이 손실을 부담할 때에는 실제 발생한 손실 중에서 주무관청지급금으로 보전되지 아니하는 손실액만을 그 보상 대상으로 하며, 주무관청환수액을 감액하거나 주무관청지급금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불가항력 사유의 처리에 있어 주무관청 부담분에 관하여는, 협약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통행료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을 통하여 주무관청 부담분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⑤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발생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사업시행자의 대출금 또는 이자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재정융자 또는 단기차입에 필요한 협조를 하기로 한다.

⑥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피해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치유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본 사업시설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제 58 조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청구 및 이의신청)

①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한 조속한 시기에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청구내용을 적시하여 다른 협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불가항력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청구(“**불가항력사유로 인한 청구**”)를 한다.

②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청구를 받은 협약당사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이의신청서가 타방 당사자에게 도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불가항력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청구의 내용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협약 제12장(분쟁의 해결)에 따라 처리한다.

- ③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청구의 내용은 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 10 장 협약의 종료

제 59 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 ① 본 협약은 중도해지되지 않는 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은 소멸한다.
- ② 본 협약이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 4년 전에 주무관청 또는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에 본 사업시설의 운영설비 및 그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포함한 관리운영권의 대상인 사업시설 전체를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계한다.
 2. 제1호에 의한 점검결과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유지, 보수를 위하여 별도의 장비를 보유하는 경우 그 가액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적절한 방법에 따라 상각하고,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종료될 때 주무관청에게 무상으로 인계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인계한 본 사업시설을 주무관청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게 본 사업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용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요령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필요한 협력을 하기로 한다.

제 60 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 ① 주무관청에 의한 해지 - 본 협약 제55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처리)에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의 말소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에 의한 해지 - 다음 각호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본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협약 제56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본 협약 제56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처리) 제3호의 사유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본 사업시설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3. 주무관청지급금의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의 자금차입계약상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③ 기타 사유로 인한 해지 - 다음 각호의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조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협약 제57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에 정한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협의개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2. 문화재와 관련한 고고학적 작업이나 위험물 발견으로 인한 예방책 또는 중화책이 시행되고 당해 사유가 발생한 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동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여, 당해 지역 공사의 진행 또는 본 사업의 관리 및 운영이 1년 이상 지체되거나 어느 협약당사자가 자기의무의 중대한 부분을 1년 이상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자금차입계약이 동 계약상의 기한 이전에 종료(또는 해지)되고 6개월 이내에 대체자금제공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단, 동 사유가 주무관청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각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 협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 일방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지통지를 할 수 있다.

④ 본조에 따라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협약당사자가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 협약을 해지하는 자가 부

담한다.

- ⑤ 본조에 따라 해지권을 갖는 협약당사자(“해지권자”)는 본조에서 정한 협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지사유의 발생사실과 90일 이내의 기간(“치유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유의 치유를 요구하거나 치유를 위한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치유기간 내에 당해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거나 치유를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해지권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해지통지의 도달로써 발생한다. 다만, 본 협약 제67조(사업시행자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변경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지권자는 해지통지를 유보한다.
- ⑥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본 협약의 해지에 관한 권리와는 별도로,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59조(매수청구권)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매수청구를 한 경우 주무관청의 매수청구인정 통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도달한 날에 본 협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 61 조 (협약해지시의 효과)

- ① 본 협약 제60조(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이 해지 되는 때에는, 해지시점에서 본 사업시설(건설기간중의 경우 기성부분)은 즉시 주무관청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의 권리, 권한 등이 소멸하며, 관리운영권도 말소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가 당사자인 계약을 주무관청이 승계하기로 한 경우 가능한 한 조속한 시간 내에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가의 지급 없이 모든 비품, 구조물, 설비, 고정 및 이동식 설비, 또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타 모든 동산과 예비부품 재고를 포함하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자산 및 본 사업시설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사용 중인 모든 사업시행자의 권리와 자산을 취득, 인수한다.
- ④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서 및 기록, 건설도면과 함께 유지관리 및 운영 계획서를 주무관청에 제공한다.
- ⑤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실사 및 점검을 수행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본 사업시설을 주무

관청에 이전한다.

- ⑥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의 종료에 따른 효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공중의 안전 및 본 사업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주무관청에 안전조치 등을 요청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62 조 (해지시지급금의 산정)

- ① 협약당사자는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의하여 부록 11(해지시지급금)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정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도록 한다.
- ③ 제2항에 의해 선정된 전문기관은 선정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여 이를 협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전문기관에 의해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귀책사유를 발생시킨 당사자가 전액 부담하고,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 ⑤ 해지시지급금에 관하여 전문기관이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본 협약 제12장(분쟁의 해결)의 절차에 따른다.
- ⑥ 본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해지시지급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
 - 1. 본 협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 등에 관하여 어떠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동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사업시설의 복구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는 경우 동 보유금액상당을 공제한다. 다만, 본 협약에서 정한 보험가입의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실제 수령하는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 2.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채권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채무를 주무관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면책적으로 인수하거나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한 경우 주무관청 또는 제3자가 면

책적으로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단,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채권금융기관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3. 해지시지급금 지급시까지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게 그 지급을 완료하지 아니한 주무관청환수금 또는 공유대상이익 등을 공제한다.
4. 해지시지급금 지급시까지 제47조(정산대상이익금 정산의 원칙 등) 제4항에 따라 주무관청에게 지급되어야 할 적립금 및 그 이자가 남아 있는 경우 그 잔액을 해지시지급금에서 공제한다.

제 63 조 (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 ① 주무관청은 본 협약 제62조(해지시지급금의 산정)에 따라 산출된 해지시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조달한 금액 중 해지일 현재 정산기준금에 관련한 미상환원리금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이를 자금차입계약(들)상 정당한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해지시지급금에 대하여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미지급 해지시지급금에 대하여 해지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실제지급일까지 기준사업수익률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주무관청은 관련 법령상 또는 달리 가질 수 있는 상계권에 추가하여 본 협약 상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한 후 상계할 수 있다.

제 64 조 (매수청구권)

-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59조(매수청구권의 인정) 및 동법시행령 제39조(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동법시행령 제40조(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가 정한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에 본 사업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총사업비가 5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2. 천재지변·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월 이상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의 보수 또는 재시공비가 당초 총사업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3. 실시협약에서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사유 발생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시설의 공사 또는 운영이 6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②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에 따른 매수가액(이하 “매수가액” 이라고 한다)은, 해지시 지급금 산정기준에 따라 사유별로 불가항력 또는 주무관청 귀책에 준하여 산정한다.

제 65 조 (기간만료, 해지 및 매수청구시 선관의무)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상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 협약의 해지 또는 매수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시설에 대하여 협약상 의무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원만한 이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11 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제 66 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① 민간투자법 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사전승인 없이 본 협약 상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등에게 본 협약, 관리운영권 및 설계, 공사 등의 도급계약상 권리 및 의무, 동산, 수입, 은행계좌, 지적재산 또는 기타 권리 및 자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본 협약상 관리운영권에 대한 담보설정을 위하여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기로 한다.

제 67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 또는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본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계속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 68 조 (출자지분의 변경)

- ① 본 협약 체결 이후 사업시행자인 덕송내각고속화도로주식회사의 출자자 구성 및 그 지분율은 부록 12(출자자 및 지분율)와 같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전체 출자지분 중 5%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동일기업 집단 내 계열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그 공동출자규모가 전체 출자지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당해 공동출자에 참여한 5% 미만의 지분율을 가진 개별 기업 포함)가 그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출자자간 합병에 의한 지분율 변경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합병의 효력발생 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전체 출자지분 중 5% 미만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가(또는 제2항에서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는 출자자를 제외한 출자자가) 그 출자지분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내용을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준공시까지 사업시행자 지정당시의 출자(예정)자 또는 (예정)출자지분을 변경하지 않기로 한다. 단, 부득이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하에 (예정)출자자 및 (예정)출자지분을 변경할 수 있다.
-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주무관청이 승인을 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출자예정자 및 지분의 변경 승인의 신청 이외에 본 협약에 정한 바와 다른 별도의 자금조달계획을 신청하여 사실상의 자금재조달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협약 제69조(자금재조달의 절차) 및 제70조(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를 준용하기로 한다.
- ⑥ 제5항에 따라 본 협약에서 정한 자금재조달을 준용할 경우 기준재무모델은 협약체결시의 재무모델을 말하며, 비교재무모델은 변경승인시의 재무모델을 말한다.

제 69 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 및 본 협약에 따른 최초 자금차입계약의 체결 이후 자금재조달(Refinancing)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자금재조달과 관련된 계획을 주무관청에 사전통보하고 수시로 자금재조달 진행과정을 보고 및 협의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공정한 시장가격 및 조건에 따라 자금재조달을 추진하여야 하며, 건설기간 중 자본구조 변경 시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자기자본 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운영기간중 자본구조 변경 시에는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비율은 자금재조달 당시 감사보고서상 관리운영권(정부보조금 제외) 잔액의 10%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사업시행자는 최종적인 자금재조달 내용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업시행조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실시협약을 변경하기로 한다.
- ⑤ 주무관청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70 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 ① 전조에 따른 자금재조달(본 협약 체결일 현재의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 체결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자금조달은 제외)로 인하여 정산기준금과 관계되어 사업시행자 및 그 출자자에게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이익은 주무관청에 전부 귀속된다.
- ② 전조에 따른 자금재조달(본 협약 체결일 현재의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 체결 후 최초로 실시하는 자금조달은 제외)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산기준금과 관계되지 않은 이익은 협약 당사자간 사이에서 50:50의 비율로 공유한다.
- ③ 제1항에 의하여 주무관청에게 귀속하는 자금재조달 공유이익은 주무관청지급금에서 차감하거나 주무관청환수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하며, 제2항에 의하여 주무관

청에게 귀속하는 자금재조달 공유이익은 부록 8(정산대상이익금 정산 비율)에 따른 정산대상이익금 정산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반영하기로 한다.

- ④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회계법인에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처리에 대해서는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자금재조달에 관한 세부요령 등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공고에서 규정한 자금재조달 관련 세부지침 및 조건에 따른다.

제 70 조의2 (자금재조달 여건 보고 및 주무관청의 자금재조달 요청 등)

-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 이후 매년 8월 말일까지 주무관청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출자자 또는 자본구조의 변경, 자금차입계약 조건의 변경 등 자금재조달 여건 발생여부를 자금재조달 세부요령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주무관청은 제1항의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자가 자금 차입 약정 체결 당시보다 더 좋은 조건의 자금재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자금재조달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자금재조달 요청에 대하여 자금재조달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주무관청에 소명하여야 한다.

제 12 장 분쟁의 해결

제 71 조 (분쟁의 해결)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본 협약 제72조(중재)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해결한다.

- ③ 협약당사자의 합의로 중재에 회부되지 못하는 경우 본 협약상 분쟁의 합의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 ④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는 이의가 없는 금액을 우선 지급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우선 지급금액은 지급되어야 할 날로부터 실제 지급일 전일까지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 72 조 (중 재)

-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으로부터 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시 중재법 및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되도록 합의할 수 있다.
- ② 중재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한국어이며, 중재부의 구성, 중재인의 선임 및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상사중재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령 등에 따른다.
- ③ 중재판정은 특별한 항소 수단에 따르지 않고 당사자에게 궁극적인 구속력이 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는 법원이나 달리 관할을 가지는 사법당국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항소나 상환청구권을 배제하며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제 13 장 기타 사항

제 73 조 (협약의 변경)

- ①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약정에 의하여만 변경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본 협약상 본 협약 체결 이후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에 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동 항목들에 관한 수치가 결정되고 협약당사자가 이를 확인하는 경우 별도의 변경협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합의된 수치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③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 ④ 협약당사자는 협약의 변경여부와 변경할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본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민간투자법의 취지와 사업시행자에게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을 통하여 사업수익성이 확보되는지의 여부 및 본 협약에 규정된 협약 당사자간의 위험배분의 원칙이 유지될 수 있게 되었는가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⑤ 본 사업기간 중에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시행령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관련 법령 및 제도가 개정되어 그 개정내용이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 또는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에 의해 본 협약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제 74 조 (협약의 수익자)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 및 그 승계인, 허용된 양수인에 대하여 효력을 지닌다. 본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협약당사자 및 그 승계인, 허용된 양수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75 조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주무관청은 자신이나 그 자산 또는 수입에 대하여 소송, 집행, 가처분이나 기타 법적 절차에서 본 협약에 따른 주무관청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통치행위 등을 이유로 한 면책주장을 하지 않기로 하며, 이는 취소할 수 없다.

제 76 조 (일부무효)

특정 관할 법률상 규정의 위법, 무효나 집행불가능은 그 범위 내에서만 그 관할에서의 유효성, 적법성이나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기타 다른 관할 법률과 본 협약상 또는 타 규정의 적법성,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77 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본 협약은 법률이나 관습에 함축되어 있는 보장, 조건이나 기타 보증, 협약당사자 간의 기타 약정, 또는 협약당사자 간에 체결된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서면 약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진술을 명시적으로 배제시킨다.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체결이 이와 같이 배제되는 여하한 보장, 조건, 보증, 약정이나 진술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확인한다.

제 78 조 (비밀유지)

① 협약당사자들은 본 협약이 유지되는 동안과 본 협약의 해지나 종료 이후 5년 동안은 본 협약의 조건과 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보관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제한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의 공개
2. 관련 협약당사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획득하지 않은(공개일에 서면기록으로 입증되는 바와 같이) 협약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3. 법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정보의 공개
4. 중재, 재판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
5. 정보공개 당사자의 법률자문,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③ 협약당사자는 선의의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의 계열회사
2. 협약당사자를 대리하는 외부설계사, 시공자, 고문이나 자문인
3.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관 및 그 자문인
4. 본 협약에 언급된 보험증서 또는 보험제안서상 보험자
5. 협약당사자의 임원, 직원, 대리인 또는 하수급자

6. 기타 주무관청이 본 사업과 관련된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

- ④ 제3항의 공개는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이나 본 협약에 따른 기타 계약을 이행, 준수하고 본 협약상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집행하는데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제 79 조 (통지)

- ① 본 협약상의 통지나 문서의 송달은 다음의 주소 또는 협약당사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하여야 한다.

1. 주무관청에 대한 통지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수신 : 남양주시 도로건설과

전화 : 031-590-2430

팩스 : 031-590-2439

2.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지

주소 : 남양주시 별내동 덕내로 291

수신 : 덕송내각고속화도로주식회사

전화 : 031-527-5695

팩스 : 031-527-2695

- ② 협약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협약 상대방에게 그 변경된 주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본 통지는 협약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송달된 때”라 함은 우편인 경우는 직접 당해 주소에 송달된 때, 팩스에 의한 경우에는 전송확인이 되는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통지가 송달된 날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통지는 다음 영업일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80 조 (언어)

- ①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의 모든 의사교환은 한국어로 한다.
- ② 본 협약은 한글본으로 작성되며, 영문본 또는 한글을 제외한 다른 언어로 작성된 경우 한글본이 해석 상 우선한다.

제 81 조 (준거법)

본 협약은 대한민국 법에 의거하여 규율되고 해석된다.

본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한 후 각기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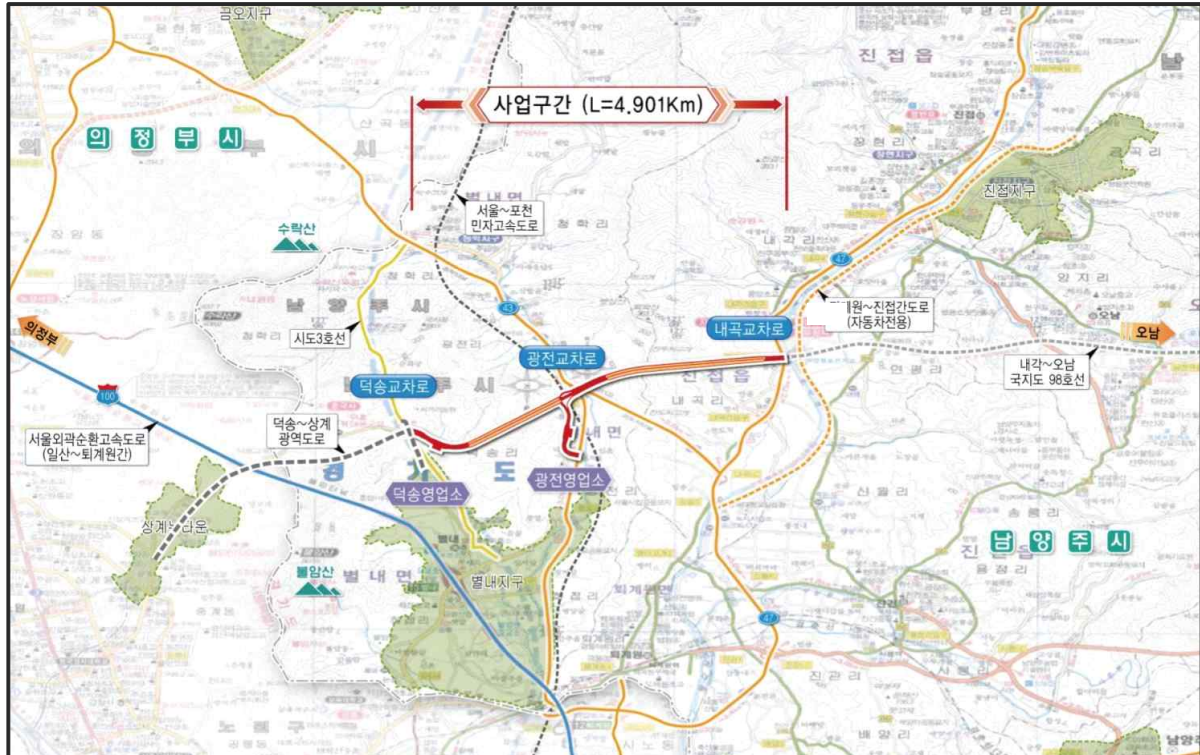
남 양 주 시 장

덕송내각고속화도로주식회사

주 광 덕

대 표 이 사 민 경 수

사 업 개 요



1. 사 업 명 :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2. 사업구간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내곡리
3. 사업규모 : L=4.901km (4차로 : B=20.0m)
4. 총사업비 : 1,649억원 (불변가격, 보상비 포함)
5. 운영기간 : 2017. 4. 14 ~ 2067. 4. 13 (50년)

총 사 업 비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조 사 비	2	2	-	-	-	-
설 계 비	36	32	-	-	-	4
공 사 비	1,105	1	215	401	346	141
보 상 비	291	209	79	-	-	3
부 대 비	96	41	22	17	12	5
운영설비비	74	-	-	4	26	44
제세공과금	22	11	-	-	-	10
영업준비금	23	7	5	5	7	1
총 사 업 비	1,649	304	320	427	391	208

주) 2007년 10월 1일 불변가격 기준

정산기준금 상각액과 수익금

1. 정산기준금 : 158,200백만원

2. 연도별 정산기준금 상각액 및 수익금

(단위 : 백만원, 경상가격)

연도	고정수익률 정산기준금			변동수익률 정산기준금			전체 정산기준금		
	수익금	상각액	합계	수익금	상각액	합계	수익금	상각액	합계
2024	3,425		3,425	3,520		3,520	6,945		6,945
2025	3,425		3,425	3,520		3,520	6,945		6,945
2026	3,425		3,425	3,520		3,520	6,945		6,945
2027	3,393	1,965	5,358	3,487	1,965	5,452	6,880	3,930	10,811
2028	3,308	1,965	5,273	3,400	1,965	5,365	6,708	3,930	10,638
2029	3,223	1,965	5,188	3,312	1,965	5,277	6,535	3,930	10,466
2030	3,138	1,965	5,103	3,225	1,965	5,190	6,363	3,930	10,293
2031	3,053	1,965	5,018	3,137	1,965	5,103	6,190	3,930	10,121
2032	2,968	1,965	4,933	3,050	1,965	5,015	6,018	3,930	9,948
2033	2,883	1,965	4,848	2,962	1,965	4,928	5,845	3,930	9,775
2034	2,797	1,965	4,763	2,875	1,965	4,840	5,672	3,930	9,603
2035	2,712	1,965	4,678	2,788	1,965	4,753	5,500	3,930	9,430
2036	2,627	1,965	4,592	2,700	1,965	4,665	5,327	3,930	9,258
2037	2,542	1,965	4,507	2,613	1,965	4,578	5,155	3,930	9,085
2038	2,457	1,965	4,422	2,525	1,965	4,490	4,982	3,930	8,913
2039	2,372	1,965	4,337	2,438	1,965	4,403	4,810	3,930	8,740
2040	2,287	1,965	4,252	2,350	1,965	4,315	4,637	3,930	8,568
2041	2,202	1,965	4,167	2,263	1,965	4,228	4,465	3,930	8,395
2042	2,117	1,965	4,082	2,175	1,965	4,141	4,292	3,930	8,223
2043	2,032	1,965	3,997	2,088	1,965	4,053	4,120	3,930	8,050
2044	1,947	1,965	3,912	2,000	1,965	3,966	3,947	3,930	7,877
2045	1,861	1,965	3,827	1,913	1,965	3,878	3,774	3,930	7,705
2046	1,776	1,965	3,742	1,826	1,965	3,791	3,602	3,930	7,532
2047	1,691	1,965	3,656	1,738	1,965	3,703	3,429	3,930	7,360

연도	고정수익률 정산기준금			변경수익률 정산기준금			전체 정산기준금		
	수익금	상각액	합계	수익금	상각액	합계	수익금	상각액	합계
2048	1,606	1,965	3,571	1,651	1,965	3,616	3,257	3,930	7,187
2049	1,521	1,965	3,486	1,563	1,965	3,528	3,084	3,930	7,015
2050	1,436	1,965	3,401	1,476	1,965	3,441	2,912	3,930	6,842
2051	1,351	1,965	3,316	1,388	1,965	3,354	2,739	3,930	6,670
2052	1,266	1,965	3,231	1,301	1,965	3,266	2,567	3,930	6,497
2053	1,181	1,965	3,146	1,213	1,965	3,179	2,394	3,930	6,325
2054	1,096	1,965	3,061	1,126	1,965	3,091	2,222	3,930	6,152
2055	1,010	1,965	2,976	1,038	1,965	3,004	2,049	3,930	5,979
2056	925	1,965	2,891	951	1,965	2,916	1,876	3,930	5,807
2057	840	1,965	2,806	864	1,965	2,829	1,704	3,930	5,634
2058	755	1,965	2,720	776	1,965	2,741	1,531	3,930	5,462
2059	670	1,965	2,635	689	1,965	2,654	1,359	3,930	5,289
2060	585	1,965	2,550	601	1,965	2,566	1,186	3,930	5,117
2061	500	1,965	2,465	514	1,965	2,479	1,014	3,930	4,944
2062	415	1,965	2,380	426	1,965	2,392	841	3,930	4,772
2063	330	1,965	2,295	339	1,965	2,304	669	3,930	4,599
2064	245	1,965	2,210	251	1,965	2,217	496	3,930	4,427
2065	160	1,965	2,125	164	1,965	2,129	324	3,930	4,254
2066	74	1,965	2,040	77	1,965	2,042	151	3,930	4,081
2067	5	491	497	5	491	497	11	983	993
합계	79,632	79,100	158,732	81,839	79,100	160,939	161,471	158,200	319,671

주) 변동수익률 정산기준금의 수익금은 기준금리에 따라 변동 예정임

추정교통량

(단위 : 대/일)

년 도	서 별 내 영 업 소				동 별 내 영 업 소				합 계
	소형	중형	대형	소계	소형	중형	대형	소계	
2024	8,074	346	163	8,583	8,621	461	295	9,377	17,960
2025	8,849	379	178	9,406	8,863	474	304	9,641	19,047
2026	8,923	382	180	9,485	8,948	478	307	9,733	19,218
2027	8,998	385	181	9,564	9,033	483	309	9,825	19,389
2028	9,101	390	184	9,675	9,152	489	313	9,954	19,629
2029	9,298	398	188	9,884	9,381	501	321	10,203	20,087
2030	9,756	418	197	10,371	9,859	527	338	10,724	21,095
2031	10,597	454	214	11,265	10,700	572	367	11,639	22,904
2032	11,267	482	227	11,976	11,398	609	390	12,397	24,373
2033	11,196	479	226	11,901	11,350	607	389	12,346	24,247
2034	11,126	476	224	11,826	11,304	604	387	12,295	24,121
2035	11,033	472	222	11,727	11,294	604	387	12,285	24,012
2036	10,993	471	222	11,686	11,243	601	385	12,229	23,915
2037	10,955	469	221	11,645	11,192	598	383	12,173	23,818
2038	10,917	468	220	11,605	11,141	595	382	12,118	23,723
2039	10,880	466	219	11,565	11,090	593	380	12,063	23,628
2040	10,842	464	219	11,525	11,040	590	378	12,008	23,533
2041	10,810	463	218	11,491	11,003	588	377	11,968	23,459
2042	10,778	462	217	11,457	10,966	586	376	11,928	23,385
2043	10,746	460	217	11,423	10,930	584	374	11,888	23,311
2044	10,714	459	216	11,389	10,893	582	373	11,848	23,237
2045	10,683	457	215	11,355	10,856	580	372	11,808	23,163
2046	10,657	456	215	11,328	10,828	579	371	11,778	23,106
2047	10,632	455	214	11,301	10,801	577	370	11,748	23,049
2048	10,606	454	214	11,274	10,773	576	369	11,718	22,992
2049	10,581	453	213	11,247	10,746	574	368	11,688	22,935
2050	10,555	452	213	11,220	10,718	573	367	11,658	22,878
2051	10,555	452	213	11,220	10,718	573	367	11,658	22,878
2052	10,555	452	213	11,220	10,718	573	367	11,658	22,878
2053	10,555	452	213	11,220	10,718	573	367	11,658	22,878
2054	10,555	452	213	11,220	10,718	573	367	11,658	22,878
2055	10,555	452	213	11,220	10,718	573	367	11,658	22,878

년 도	서 별 내 영 업 소				동 별 내 영 업 소				합 계
	소형	중형	대형	소계	소형	중형	대형	소계	
2056	10,555	452	213	11,220	10,718	573	367	11,658	22,878
2057	10,555	452	213	11,220	10,718	573	367	11,658	22,878
2058	10,555	452	213	11,220	10,718	573	367	11,658	22,878
2059	10,555	452	213	11,220	10,718	573	367	11,658	22,878
2060	10,555	452	213	11,220	10,718	573	367	11,658	22,878
2061	10,555	452	213	11,220	10,718	573	367	11,658	22,878
2062	10,555	452	213	11,220	10,718	573	367	11,658	22,878
2063	10,555	452	213	11,220	10,718	573	367	11,658	22,878
2064	10,555	452	213	11,220	10,718	573	367	11,658	22,878
2065	10,555	452	213	11,220	10,718	573	367	11,658	22,878
2066	10,555	452	213	11,220	10,718	573	367	11,658	22,878
2067	10,555	452	213	11,220	10,718	573	367	11,658	22,878

차종별 기준통행료

(단위 : 원)

구분

내 용

당초

차종	2017년		2018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7년		2028년 ~2047년	
	1구간	2구간	1구간	2구간	1구간	2구간	1구간	2구간	1구간	2구간	1구간	2구간
1층	980	490	1,044	522	1,080	540	1,128	564	1,164	582	1,196	598
2층	1,800	900	1,794	897	1,794	897	1,794	897	1,794	897	1,794	897
3층	2,400	1,200	2,392	1,196	2,392	1,196	2,392	1,196	2,392	1,196	2,392	1,196

주) 2007년 10월 1일 불변가격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변경

차종	2017년		2018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7년		2028년 ~2047년	
	1구간	2구간	1구간	2구간	1구간	2구간	1구간	2구간	1구간	2구간	1구간	2구간	1구간	2구간
1층	980	490	1,044	522	1,080	540	1,128	564	1,121	560	1,157	578	1,189	594
2층	1,800	900	1,794	897	1,794	897	1,794	897	1,783	892	1,783	892	1,783	892
3층	2,400	1,200	2,392	1,196	2,392	1,196	2,392	1,196	2,378	1,189	2,378	1,189	2,378	1,189

주) 2007년 10월 1일 불변가격 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통행료수입

(단위 : 백만원)

년 도	서 별 내 영 업 소				동 별 내 영 업 소				합 계
	소형	중형	대형	소계	소형	중형	대형	소계	
2024	3,303	225	141	3,670	1,764	150	128	2,042	5,712
2025	3,737	247	154	4,138	1,871	154	132	2,157	6,295
2026	3,768	249	156	4,173	1,889	156	133	2,178	6,351
2027	3,800	251	157	4,207	1,907	157	134	2,198	6,406
2028	3,949	254	160	4,363	1,986	159	136	2,281	6,643
2029	4,035	259	163	4,457	2,035	163	139	2,338	6,795
2030	4,233	272	171	4,676	2,139	172	147	2,457	7,134
2031	4,598	296	186	5,080	2,322	186	159	2,667	7,746
2032	4,889	314	197	5,400	2,473	198	169	2,840	8,240
2033	4,858	312	196	5,366	2,463	198	169	2,829	8,195
2034	4,828	310	194	5,332	2,453	197	168	2,817	8,149
2035	4,788	307	193	5,287	2,450	197	168	2,815	8,102
2036	4,770	307	193	5,269	2,439	196	167	2,802	8,071
2037	4,754	305	192	5,251	2,428	195	166	2,789	8,040
2038	4,737	305	191	5,233	2,417	194	166	2,777	8,009
2039	4,721	303	190	5,214	2,406	193	165	2,764	7,978
2040	4,705	302	190	5,197	2,395	192	164	2,751	7,948
2041	4,691	301	189	5,181	2,387	191	164	2,742	7,923
2042	4,677	301	188	5,166	2,379	191	163	2,733	7,899
2043	4,663	299	188	5,151	2,371	190	162	2,724	7,874
2044	4,649	299	187	5,135	2,363	189	162	2,715	7,850
2045	4,636	297	187	5,120	2,355	189	161	2,706	7,825
2046	4,624	297	187	5,108	2,349	188	161	2,699	7,806
2047	4,614	296	186	5,095	2,343	188	161	2,692	7,787
2048	4,602	296	186	5,083	2,337	187	160	2,685	7,768
2049	4,591	295	185	5,071	2,331	187	160	2,678	7,749
2050	4,580	294	185	5,059	2,325	186	159	2,671	7,730
2051	4,580	294	185	5,059	2,325	186	159	2,671	7,730
2052	4,580	294	185	5,059	2,325	186	159	2,671	7,730
2053	4,580	294	185	5,059	2,325	186	159	2,671	7,730
2054	4,580	294	185	5,059	2,325	186	159	2,671	7,730
2055	4,580	294	185	5,059	2,325	186	159	2,671	7,730

년 도	서 별 내 영 업 소				동 별 내 영 업 소				합 계
	소형	중형	대형	소계	소형	중형	대형	소계	
2056	4,580	294	185	5,059	2,325	186	159	2,671	7,730
2057	4,580	294	185	5,059	2,325	186	159	2,671	7,730
2058	4,580	294	185	5,059	2,325	186	159	2,671	7,730
2059	4,580	294	185	5,059	2,325	186	159	2,671	7,730
2060	4,580	294	185	5,059	2,325	186	159	2,671	7,730
2061	4,580	294	185	5,059	2,325	186	159	2,671	7,730
2062	4,580	294	185	5,059	2,325	186	159	2,671	7,730
2063	4,580	294	185	5,059	2,325	186	159	2,671	7,730
2064	4,580	294	185	5,059	2,325	186	159	2,671	7,730
2065	4,580	294	185	5,059	2,325	186	159	2,671	7,730
2066	4,580	294	185	5,059	2,325	186	159	2,671	7,730
2067	1,292	83	52	1,428	656	53	45	754	2,181
합 계	195,373	12,581	7,902	215,857	99,244	7,978	6,816	114,038	329,895

주) 2007년 10월 1일 불변가격 기준

운영비용

(단위 : 백만원)

년도	운영비용				년도	운영비용			
	법인세제외 운영비용 (대수선비별도)	대수선비	법인세	계		법인세제외 운영비용 (대수선비별도)	대수선비	법인세	계
2024	3,540			3,540	2046	3,774	137		3,911
2025	4,541			4,541	2047	4,198			4,198
2026	3,526			3,526	2048	3,666			3,666
2027	4,748	599		5,346	2049	3,762	599		4,361
2028	4,002			4,002	2050	3,651	270		3,921
2029	4,099			4,099	2051	3,748			3,748
2030	3,985			3,985	2052	4,162			4,162
2031	4,078	137		4,215	2053	3,828			3,828
2032	4,301			4,301	2054	3,717			3,717
2033	3,912	270		4,182	2055	3,816			3,816
2034	3,796			3,796	2056	3,613	829		4,441
2035	3,889			3,889	2057	4,039			4,039
2036	3,866	829		4,695	2058	3,602			3,602
2037	4,288			4,288	2059	3,701			3,701
2038	3,845	599		4,444	2060	3,685	599		4,284
2039	3,940			3,940	2061	3,785	137		3,922
2040	3,733			3,733	2062	4,108			4,108
2041	3,828			3,828	2063	3,776			3,776
2042	4,146			4,146	2064	3,575			3,575
2043	3,810			3,810	2065	3,675			3,675
2044	3,790			3,790	2066	3,567			3,567
2045	3,886			3,886	2067	1,863	270		2,133
총 계						168,855	5,275		174,130

주1) 2007년 10월 1일 불변가격 기준

주2) 상기 운영비는 2023년 주무관청 운영비 지원 40억2천8백만원이 공제된 금액임

정산대상이익금 정산 비율

연도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2024년~2026년	73%	27%
2027년~2033년	84%	16%
2034년~2043년	94%	6%
2044년~2063년	90%	10%
2064년~2067년	94%	6%
전기간 평균	91%	9%

* 상기 정산 비율은 기준금리 및 운영비 변동에 따라 변동 예정임

정산대상이익금 산정

(단위 : 백만원, 경상가격)

연도	통행료수입 (A)	운영비용 (B)	제세공과금 (C)	정산대상이익		
				정산이익금 (A-B-C)	주무관청귀속 (E)	사업시행자귀속 (=D-E)
2024	7,153	5,131		2,022	1,476	546
2025	7,807	6,753		1,055	770	285
2026	8,399	5,353		3,046	2,224	822
2027	8,705	8,279		426	358	68
2028	8,932	6,321		2,611	2,193	418
2029	9,421	6,603		2,818	2,367	451
2030	10,238	6,548		3,690	3,100	590
2031	11,392	7,065		4,327	3,634	692
2032	12,256	7,353		4,903	4,118	784
2033	12,456	7,294		5,162	4,336	826
2034	12,502	6,752		5,750	5,405	345
2035	12,814	7,056		5,758	5,413	345
2036	13,094	8,689		4,405	4,140	264
2037	13,118	8,094		5,024	4,723	301
2038	13,449	8,557		4,893	4,599	294
2039	13,776	7,737		6,039	5,676	362
2040	14,054	7,477		6,577	6,182	395
2041	14,085	7,821		6,263	5,888	376
2042	14,422	8,642		5,780	5,433	347
2043	14,759	8,099		6,660	6,260	400
2044	15,034	8,218		6,816	6,135	682
2045	15,070	8,595		6,475	5,828	648
2046	15,406	8,824		6,582	5,924	658
2047	15,737	9,660		6,076	5,469	608
2048	16,029	8,603		7,425	6,683	743
2049	16,059	10,440		5,619	5,057	562
2050	16,404	9,575		6,829	6,146	683
2051	16,774	9,335		7,439	6,695	744
2052	17,195	10,573		6,622	5,960	662
2053	17,530	9,919		7,612	6,850	761
2054	17,900	9,825		8,075	7,267	807
2055	18,197	10,287		7,911	7,119	791
2056	18,452	12,213		6,239	5,615	624
2057	19,042	11,329		7,713	6,941	771
2058	19,330	10,305		9,025	8,123	903

연도	통행료수입 (A)	운영비용 (B)	제세공과금 (C)	정산대상이익		
				정산이익금 (A-B-C)	주무관청귀속 (E)	사업시행자귀속 (=D-E)
2059	19,544	10,801		8,744	7,869	874
2060	20,230	12,751		7,479	6,731	748
2061	20,472	11,908		8,564	7,708	856
2062	20,677	12,722		7,956	7,160	796
2063	21,318	11,928		9,391	8,452	939
2064	21,757	11,518		10,239	9,625	614
2065	22,086	12,077		10,009	9,408	601
2066	22,470	11,957		10,513	9,882	631
2067	6,419	7,294		-876		-876
합계	661,969	396,283		265,686	240,945	24,741

* 2007년 9월 30일 기준 불변가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함

보험내역

비 고	내 용
가입보험	1) 완성토목공사물보험 2) 기업휴지보험 3) 사용자배상책임보험 4) 영업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	1) 완성토목공사물보험 : 공사비+ 운영설비비(유지관리장비 제외) - 공사비 중 민원처리비는 부보대상에서 제외 2) 기업휴지보험 - 고정비(인건비+ 경비)와 지급이자 3) 사용자배상책임보험 - 본 사업의 임·직원 인건비 4) 영업배상책임보험 - 1사고당 10억원
보 험 료	1) 재물손해담보 : 0.057% 2) 기업휴지보험 : 0.103% 3) 사용자배상책임보험 : 본 사업의 임·직원 인건비의 0.14% 4) 영업배상책임보험 : 22백만원/년(2007년 10월 1일 불변가격 기준)

해지시지급금

I.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시지급금은 해지일 현재 상각되지 않은 부록 3(정산기준금 상각액과 수익금)의 정산기준금 잔액(부록 3(정산기준금 상각액과 수익금) 상에서의 해지일 이후 정산기준금 상각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 해지일 이후 본 협약 제63조(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제1항에 따라 정산기준금에 관련한 미상환원리금이 주무관청에 의해 직접 지급된 경우 지급된 미상환원리금을 공제한다.

II. 주무관청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

주무관청 귀책사유로 인한 해지시지급금은 해지일 현재 상각되지 않은 부록 3(정산기준금 상각액과 수익금)의 정산기준금 잔액(부록 3(정산기준금 상각액과 수익금) 상에서의 해지일 이후 정산기준금 상각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 해지일 이후 본 협약 제63조(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제1항에 따라 정산기준금에 관련한 미상환원리금이 주무관청에 의해 직접 지급된 경우 지급된 미상환원리금을 공제한다.

III.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해지

1. 비정치적 불가항력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

정치적 불가항력으로 인한 해지시지급금은 해지일 현재 상각되지 않은 부록 3(정산기준금 상각액과 수익금)의 정산기준금 잔액(부록 3(정산기준금 상각액과 수익금) 상에서의 해지일 이후 정산기준금 상각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며, 해지일 현재 상환기일이 미도래한 미보장 자금차입에 따른 잔여 원리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단, 해지일 이후 본 협약 제63조(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제1항에 따라 정산기준금에 관련한 미상환원리금이 주무관청에 의해 직접 지급된 경우 지급된 미상환원리금을 공제한다.

2. 정치적 불가항력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

정치적 불가항력으로 인한 해지시지급금은 해지일 현재 상각되지 않은 부록 3(정산기준금

상각액과 수익금)의 정산기준금 잔액{부록 3(정산기준금 상각액과 수익금) 상에서의 해지
일 이후 정산기준금 상각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하며, 해지일 현재 상환기일이 미도래
한 미보장 자금차입에 따른 잔여 원리금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단, 해지일 이후 본 협약 제63조(해지시지급금 지급방법) 제1항에 따라 정산기준금에 관련
한 미상환원리금이 주무관청에 의해 직접 지급된 경우 지급된 미상환원리금을 공제한다.

출자자 및 지분율

구 분	내 용	
당 초		
	회 원 사	출 자 지 분 (%)
	DL이앤씨(주)	75%
	미래에셋덕송내각고속화도로 전문투자형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25%
	계	100.0%
변 경		
	회 원 사	출 자 지 분 (%)
	DL이앤씨(주)	75%
	미 정 (금융약정 과정에서 업데이트 예정)	25%
	계	100.0%

변경실행협약 재무모델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행협약 재무모델 전자파일을 CD-ROM으로 별첨함.

기존실시협약 재무모델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2023년 법인세율 인하효과를 반영한 기존실시협약 재무모델 전자파일을 CD-ROM으로 별첨함.